

제 53 회

한반도 미래비전과 동북아 평화구축 전문가 정책포럼

APEC 정상회담 이후, 한중관계의 미래는?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Institute for Korean Peninsula Future Strategies

목 차

포럼 일정 및 참석자 명단.....	3
발표문.....	4
지정 토론자 토론문.....	17
참석자 프로필.....	38

포럼일정 및 참석자 명단

2:30-2:50 환영 다과회

2:50-3:00 환영사 (서인택 회장, GPF Korea)

3:00-6:15 주제: **APEC 정상회담 이후, 한중 관계의 미래는?**

발표자: **김예경 박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기획 진행. 사회: **곽태환 박사**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전 통일연구원 원장)

지정 토론자 (가나다 순)

1. **이병철 박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2. **이상수 박사** (제주 평화연구소 초빙연구위원)
3. **이영학 박사** (국방연구원 인태안보연구실장)
4. **정재홍 박사**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중국연구센터장)
5. **조성렬 박사**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전 오사카 총영사)
6. **황재호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GPF Korea 참석자: **서인택 회장, 김한솔 사무국장, 기성훈 팀장**

6:30-8:30 참석자 만찬

제53회 전문가 정책포럼 발표문(2025. 11. 22)

APEC 정상회담 이후, 한중 관계의 미래는?

김예경 박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원)

목차

- I. 들어가며
- II. APEC 계기 한중정상회담 주요 합의 사항
- III. 주요 쟁점
- IV. 한중 관계 주요 과제

I. 들어가며

11월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국빈 방문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이루어진 시 주석의 방한은 한중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를 고조시켰다.

정상회담 개최에 앞서, 한·중 정상은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축전(6.4)과 전화 통화(6.11), 그리고 한국의 중국 특사단(8.26) 및 전승절 대표단(9.3) 파견 등을 통해 사전 소통이 있어왔으며,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의 첫 대면 회담으로 미래 한·중 관계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기도 했다.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는 인민일보(10.29.) 기고에서 “한중관계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하는 중요한 시기에 들어섰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약 100분 간 진행됐으며, 외교, 경제, 문화 및 인적 교류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민감한 정치적 갈등 사안을 부각하기보다는 유독 양국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초국적 범죄 대응까지 양국간 협력의 범위가 확대된 것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신임 총리가 중일 정상회담(10.31.) 모두 발언에서 신강 위구르 인권 문제 등 보편적 가치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여전히 ‘가치외교’ 중심적 양자회담을 진행했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일 정상회담(10.31.) 다음날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린신이(林信義) 대만 총통부 선임 고문 등과 면담하며 중국측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¹

한중은 무엇보다도 그동안 부침이 있었던 양국 관계의 ‘전면 복원’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국 정상회담 직후 위성락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논의 및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위성락 실장은 이재명 정부가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외교를 통해 한중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했다고 평가했으며, 한중 양국은 역사적 경험과 경제적 호혜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시대 변화에 맞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² 중국 관영 매체인

¹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外交部发言人就日本领导人APEC会议期间涉台错误言行答记者问”, 2025.11.1.; 「“태극기 목례는 다카이치 판단” 일본도 놀랐다」, 『서울신문』, 2025.11.2.

² 대한민국 대통령실, “시진핑 주석 국빈방한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브리핑”, 2025.11.1.

신화통신은 이번 정상회담이 최근 몇 년간 기복이 컸던 한·중 관계에 ‘안정적 출발’을 이끌고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했다.³ 본 발제문은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APEC 계기 한중정상회담 주요 합의 사항

(1) 양국 정상의 모두 발언 요지

한중 양국 정상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하며, 양국 정부 간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우호적 신뢰 축적을 병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을 소개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였고, 이에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하였다.⁴

한편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중한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중요하고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고 강조하며 한중관계의 높은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수교 33년 동안 두 나라는 사회 제도와 이데올로기 차이를 넘어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상호 성취와 공동 번영을 이뤘다” 며, 중국은 한중관계를 중요시하 대(對)한국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며, 한국 정부와의 우호적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시진핑 주석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기 위해 한국 측에 네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제도와 핵심이익을 존중하며 갈등과 이견을 적절히 해결하자는 것이다. 둘째, 한중 FTA 2단계 협상과 AI, 바이오제약, 녹색산업, 실버경제 등 신흥 산업 협력을 통해 경제무역 협력을 제고하고, 온라인 도박과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미디어·싱크탱크 등 인적·문화 교류 확대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자는 것이다. 넷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과 지역경제 통합, ‘아태공동체’ 구축, 다자주의 실천 및 글로벌 거버넌스의 공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이다

(2) 주요 논의 및 합의 사항

양국은 정치적 신뢰 확보와 민간 차원의 신뢰 축적을 병행하며, 고위급 정례 소통 채널 가동과 다양한 분야 교류 확대를 통해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을 도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민생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한·중 통화 스왑 계약 연장과 FTA 서비스·투자 협상 진전을 추진하고, 지방경제 활성화, 공급망 안정화, 문화·환경 협력 강화 및 인적교류 활성화에도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 공조를 통해 민생 안정에 기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표] 한중 정상회담(11.1.) 계기, 양국 간 주요 합의 문서

종 류	구 분	내용 및 기대효과
재계약 (1건)	원·위안 통화스왑	5년 만기, 70조 원(약 4,000억 위안) 규모, 양국 금융·외환시장의 안정 및 교역 증진

³ 「시 주석,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 “전략적 협력 동반자 발전시켜 진정한 다자주의 실천하자”」, 『신화망』, 2025.11.2.

⁴ 외교부, “2025 APEC 정상회의 성과 및 주요 양자회담 개최 결과”, Mofa News, 제 369 호, 2025.11.4.

MOU (6건)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 (2026~30)	장기적 협력 방향 설정, 한중 간 호혜적 협력 추진 기반 마련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 뒷받침, 경제협력 제도적 기반 강화
	실버산업 및 혁신창업	양국 국민 민생에 실질적 기여, 미래지향적 협력 추진
	농산물 중국 수출 지원	한국 농산물의 중국 수출 원활화 지원, 식물 검역 요건 관련 협력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초국가적 스캠 범죄 공동대응 기반 마련
	언론사 간 교류	중국 언론사와 한국 언론사 간 협력 강화, 양국 국민 간 감정적 거리 해소

※ 자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브리핑

한중 양국간 비공식회담에서는 중국 정부의 한화오션 미국 법인에 대한 제재 철회 여부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은 채 “미중 간 무역 문제가 풀리면 그 분위기에서 한화오션 측도 생산적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정도만 밝히고, 중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제재 철회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나 약속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필리조선소 등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중 정상회담 당시 이미 제재 철회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1월 6일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한화오션 산하 5개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넣은 조치의 중단 여부와 관련하여, “최근 상무부는 중미 쿠알라룸푸르 협상의 주요 성과와 합의를 소개했고, 여기에는 펜타닐 관세와 범 집행 협력, 농산품 무역, 미국의 중국 해운·물류·조선업 무역법 301조 조치 등이 포함된다”고 답변한 바 있다.⁵

한편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서해 구조물, 한한령, 공급망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해당 사안들에 좋은 논의가 있었고, 실무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여러 현안에 걸쳐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는 서로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그런 맥락에서 다양한 안보 이슈가 다뤄졌다”고만 밝혔다.⁶

III. 주요 쟁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관계와 공급망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양국이 중점적으로 강조한 사안과 표현의 뉘앙스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특히 한국이 ‘한반도 평화’를 우선시한 반면, 중국은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등 주요 관심사에서 견해의 차이가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를 의견 불일치나 불협화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국가 간 정상회담에서는 각국이 자국의

⁵ 미·중 휴전모드 척척척…중, 한화오션 제재도 사실상 ‘유예’하고 미국 지켜볼듯, 『경향신문』, 2025.11.8.

⁶ 「한중 회담, 민생·경제는 진전…‘비핵화’·한한령 해제는 제자리」, 『한겨레』, 2025.11.2.

이해관계에 따라 핵심 의제를 제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하며,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나 향후 방향은 후속 조치를 통해 보다 명확히 파악될 수 있다. 아울러 미·중 전략 경쟁과 한반도 정세 변화 등 외부 환경 요인 역시 이번 회담의 배경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1)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재확인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성숙을 언급한 것은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의 측면에서 일정한 방향성이 자리잡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는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공식적으로 언급되며,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가 재차 명확히 천명되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⁷ 지난 6월 시주석의 축전에서 중국은 다양한 계기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격상되며 공식적으로 사용해 왔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식 발표에서 등장한 적이 없다. 윤석열 정부 당시 한중정상회담은 2022년 11월 발리 G20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정상회담과 2024년 11월 페루 리마 APEC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 등 총 2차례 개최되었으며, 당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상호 존중과 호혜”, “성숙한 한중관계”, “공동이익”, “정치적 신뢰” 등이 한중정상회담에서 오간 주요 공식 표현이었다.

시진핑 주석은 2022년 11월 발리 한중 정상회담에서 “협력해 나가야 한다. 양국은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2024년 11월 리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우리는 교류 협력을 심화하고,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양국 국민에게 복지를 가져다 주고, 지역의 평화·안정과 발전, 번영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따라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으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과 안정을 부각했다는 면에서도 실질적인 성과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2)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 지속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역내 안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운을 떼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중국과 북한의 고위급 교류가 활발한 것에 대해 “북 관여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메시지는 지난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매우 적극적인 의지가 표명된 바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중국에 대해서도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비공개회담에서는 이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을 소개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한 데 대해서, 시 주석도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시 주석의 공개된 발언에서 ‘한반도’와 ‘비핵화’ 등의 단어가 언급되지 않은 것에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된다. 특히 북한을 의식한 시진핑 주석이 공개 발언에서

⁷ 이 대통령 “전략적 소통 강화”, 시진핑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 중시, 서울신문, 2025.11.1.

북한이나 한반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대신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겠다’고 에둘러 말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표현은 북한을 직접 거론하는 대신 북핵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중국의 대북·대한반도 정책의 변화나 적극적인 협력과 역할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다만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 및 한반도 문제 해결의 방식에 대한 기존 입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해결에 있어 핵심 행위자인 미국과 북한의 관계 변화 등 국제정세 상황에 따라 중국의 역할의 방향성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 한반도 비핵화 달성, △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 등 3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2024년 3월 양회 개최 당시 중국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관련 기자회견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쌍궤병행’과 ‘단계적-동시적 접근’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근본적 해법은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고, 모든 당사국, 특히 “합리적인 북한의 우려”를 해결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2022년 4월 시진핑 주석이 보아오포럼 연차총회에서 제안한 ‘글로벌안보이니셔티브(GSI)’의 틀에서도 중국의 한반도 문제 인식과 명확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를 통해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한반도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기제 구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및 “모든 당사자의 합법적인 우려”에 대한 균형 있는 해결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관련 당사국들은 모순을 심화시키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제재와 압박에 집착하는 대신 냉정과 자제를 발휘하고 상황을 완화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글로벌안보이니셔티브의 기본 주장은 주권존중과 영토보전, 내정불간섭, 각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 존중, 냉전 사고 및 일방주의 반대, 안보불가분원칙(安全不可分离, indivisible security) 견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⁸

지난 5월 러시아 전승절 80주년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새 시대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동 성명을 통해 두 정상은 미국 주도의 적대적 정책과 중·러 분열 시도를 ‘이중 봉쇄(double containment)’로 규정하며 이에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NATO의 아시아태평양 동진과 핵 공유,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이 지역 평화와 전략적 안정(strategic stability)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미국이 절대 안보를 추구하며 중·러 억지력 약화를 시도해 군비경쟁과 핵 충돌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공동성명은 미국의 그러한 행위가 안보 불가분 원칙(indivisible security)⁹ 과 전략적 안정에 위배되며, 세계 안보와 군축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중·러는 상호 안보와 전략적 안정 강화를 천명하며, 미국 중심의 안보 체계에 대응해 공동 대응

⁸ “中 “중국 안전해야 세계도 안전”...시진핑 안보구상 상세설명”, 『연합뉴스』, 2023.2.21.; 「关于全球治理变革和建设的中国方案」, 『新华网』, 2023.9.13.

⁹ 안보불가분의 원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국가 간 안보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제기되었다. 1975년 헬싱키 최종협정과 1999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이스탄불 정상회의에서 공식화되었으며, 이는 한 국가의 안보 강화가 다른 국가의 안보 희생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이 원칙은 국가들이 자국 안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타국의 안보를 해치지 않을 의무를 명시하며, 집단안보와 협력안보의 기반이 된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이 원칙 위반으로 규정하며 서방과 갈등을 빚고 있고, 중국도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에서 이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의지를 재확인했다.¹⁰

한편 중국은 한반도 문제가 자국의 국익, 특히 핵심이익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은 용인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입장을 표명해 왔다. 2024년 11월 시진핑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역시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며 “당사자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북·러 군사 협력 문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시 주석은 “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고 혼란이 나는 것(生戰生亂)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중국의 ‘전략 안보와 핵심 이익’이 위협받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¹¹

예컨대, 2017년 북핵위기 당시 중국은 북중 접경 지역의 불안정 요인에 환경문제를 추가한 바 있다. 중국은 ‘전략 안보와 환경안전’을 북한에 대해 억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마지노선(底线)’이라고 밝혔다.¹² 북한이 이러한 마지노선을 지키지 않고 스스로의 땅과 함께 중국 동북지역까지 오염시킨다면 지금 같은 북중관계의 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2017년 9월 4일 중국 환경보호부 홈페이지에는 ‘북한 제6차 핵실험 동북 접경 및 주변 지역 방사능 검측 결과(2017.9.4. 05:00)’가 게시되었으며, 이번 북한 핵 실험이 아직까지 중국 환경 및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이 설정하고 있는 ‘마지노선’은 북한의 핵 활동이 중국 동북부 지역에 어떤 오염도 일으키지 않고, 대량의 난민이 북한에서 탈출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압록강 반대편에 중국과 적대적인 정권이 세워지지 않고, 미군이 압록강 주변에 주둔해서는 안 된다는 것 등으로 열거되고 있다. 이러한 마지노선을 넘을 경우, 중국은 어떠한 대가를 치루더라도 동북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수호할 것이라는 것이다.¹³

(3) 중국의 ‘핵심이익과 주요 관심사’ 존중 요구

한중 정상간 대만이나 서해구조물 등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 언급은 없었다. 다만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강조했다던 ‘핵심이익과 중대관심사’에 대한 우리의 심층적인 분석과 이해가 요구되며, 이를 토대로 한중관계에서 해당 현안의 접근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핵심이익과 관련해서는 이미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1년 9월 6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중국의 평화발전(中国的和平发展)’을 제목으로 한 백서에 따르면, 중국의 핵심이익은 “국가주권, 국가안보, 영토완정, 국가통일, 중국헌법이 확립한 국가정치체제와 사회안정, 경제사회지속발전의 기본보장” 등을 말한다.¹⁴

‘중대관심사’는 핵심이익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중국 외교정책에서 상세한 설명이 없으며, 가변성과 변동성을 갖고 있고, 중국의 이해관계에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사안일 수 있다. 따라서 공급망 이슈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다양한 해석을 요구한다.¹⁵

¹⁰ 전성훈, “전략적 안정(Strategic Stability)에 대한 미-러, 미-중 갈등과 정책적 시사점”, 『세종포커스』, 2025.5.26.

¹¹ 박민희, ““한반도 전쟁·혼란 용납 못 해” 시진핑 발언 속 고도의 노림수”, 『한겨레』, 2024.11.18.

¹² “中国该如何应对朝鲜新核试”, 『环球网』, 2017.9.3.; “中国对朝核问题有一条底线: 东北的安全与稳定”, 『环球网』, 2017.4.5.

¹³ 김예경, “북중수교 70년 평가와 중국의 대북정책 딜레마: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21권3호, 현대중국학회, 2019. 12, pp. 18-19.

¹⁴ “白皮书: 界定中国核心利益范围 坚持独立自主和平外交”, 『新华网』, 9月6日.

¹⁵ 方力, 赵可金, “国家核心利益与中国新外交”, 『国际政治科学』, 2021年, 第6卷第3期(总第23期), p. 75.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한국이 자국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배려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이나 대만 문제 등에서 중국의 입장을 존중해 달라는 간접적인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대만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 중에서도 핵심이익”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측에도 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레드라인(红线)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¹⁶ 최근 한미일 3국이 공동성명을 통해 대만문제에 대한 공통된 입장 표명이 표명되고 있는 것에 중국은 자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며, 이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특히, 최근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도전이자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⁷ 최근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대만 인근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도 했다.¹⁸

(4) 중국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강조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 한국 정상의 발언문이나 의제 논의 등에서 강조되지 않고, 중국측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의 강조다. 중국은 “긴밀한 다자간 협력을 통해 평화 발전을 함께 촉진하자”고 한국에 제안했으며, 한국 측이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했다. 또한 중국이 APEC 의장국 인계를 계기로, 함께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와 지역경제 통합을 추진하고, ‘아태공동체’를 함께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중국과 한국은 진정한 다자주의를 공동 실천하고 다자무역체제를 유지하며 글로벌 거버넌스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¹⁹

이러한 방향성은 중국이 최근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구체화·정교화하면서, 자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인식과 실천을 국제사회에 투사하는 과정과 맥락을 같이한다. 지난 4월 중앙주변공작회의(中央周边工作会议)를 통해 주변외교 정책이 ‘최상위 설계(顶层设计)’를 통해 업그레이드되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아시아 중심 지역 전략으로 더욱 체계화되어 가고 있다. 동시에 지난 9월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全球治理倡议, GGI)’를 추가로 제시하며, 2021~2025년까지 발전(GDI, 2021), 안보(GSI, 2022), 문명(GCI, 2023), 거버넌스(GGI, 2025) 등 4대 글로벌 구상이 단계적으로 발전하여,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국방안(中国方案)’이 더욱 정교화되고 있다.²⁰

이번에 발표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는 주권 평등, 국제법치, 다자주의, 인간 중심, 실질적 협력 등 원칙을 기반으로 국제질서의 구조적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고, 글로벌 안정과 공평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포괄적 계획을 담고 있다.²¹ 이를 통해 복잡해진 국제 환경 속에서 중국이 국력 강화에 따른 자신감을 가지고, 능동적인 역할을

¹⁶ 「台湾问题是中国核心利益中的核心，是中美关系第一条不可逾越的红线」, 『国际在线』, 2025年6月11日.

¹⁷ 「격해진 중국 “한국, 대만 문제 왈가왈부…언행 신중하라”」, 『한겨레』, 2024년6월5일자; 「“대만 국제기구 참여 지지”… 한미일, 中 견제 첫 메시지」, 『서울신문』, 2025년6월17일자.

¹⁸ 「中, '대만·남중국해 거론' 한미일외교장관 성명에 "강한 불만"」, 『연합뉴스』, 2025.9.23.;

¹⁹ 「시 주석,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 “전략적 협력 동반자 발전시켜 진정한 다자주의 실천하자”」, 『신화망』, 2025.11.2.

²⁰ 김예경, 김동욱, “중국의 외교·경제안보 전략 동향과 한중관계”, NARS Brief, 제113호, 2025.10.28.

²¹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全球治理倡议概念文件(2025-09-01),” https://www.mfa.gov.cn/web/wjbxw_new/202509/t20250901_11699909.shtml(검색일: 2025년 10월 10일).

하겠다는 의지가 적극 발현되고 있다.²²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중국은 국제사회가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체계를 수호하며, 유엔이 국제 문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며,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주장의 실천적 사례가 이번 대한민국 경주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일방적 관세 부과를 앞세워 ‘보호주의’의 상징으로 변한 미국과 ‘자유무역 수호자’임을 과시하는 중국의 ‘대결’로 전세계의 관심을 모았다.²³ APEC 21개 회원은 폐막식 당일 ‘연결·혁신·번영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추진하자’는 내용이 담긴 ‘경주선언’을 채택했다. 그러나 선언문에는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를 담지는 못했으며, “우리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의제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 시장 주도적인 방식으로 아태지역의 경제통합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주요 아젠다로 제안한 내용이기도 하다.

정상선언문에 빠진 자유무역 관련 내용은 장관급인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AMM) 공동선언문에 포함됐다. 21개 아펙 회원들의 외교·통상 장관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무역 현안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 세계무역기구(WTO)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며 “세계무역기구에서 합의된 규범이 글로벌 무역 촉진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자유무역에 대한 문구를 넣는 데 강하게 반대하면서, 다른 회원들과의 여러 차례 조율을 거듭한 결과였다.

2026년 제33차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은 주최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기조를 적극적으로 전파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제무역규범과 다자협력체계 재편 등 미·중 간 국제경제질서의 주도권 경쟁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은 경제적 이익과 외교적 입장을 동시에 고려한, 명확한 참여 원칙과 방향성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IV. 한중 관계 주요 과제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향후 과제에 대한 검토와 노력이 필요하다.²⁴ 특히 향후 한중 양국의 협력 방향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구분하여 ‘비정치화’하고, 민감도가 낮은 영역에서부터 협력 성과를 쌓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양국이 합의한 ‘실버산업’ 등 신흥산업 협력은 고령화사회 대응이라는 양국의 공통된 문제 인식이 기반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민생에 가장 가까운 의제 중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1) 미중 간 ‘균형외교’와 ‘균형잡힌 외교’의 구분

미중 경쟁에서의 한국의 ‘균형외교’와 ‘균형 잡힌 외교’ 사이의 구분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연대를 기본 가치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추진한 바 있으며,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수호와 발전을 위해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²² 이동률, “외교 개관: 중국식 대국 외교”,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엮음, 『차이나 핸드북: 거대한 중국을 한눈에 보는 법』, 서울: 후마니타스, 2025, p. 154.

²³ 박민희, 서영지, 「‘자유무역’ 둘러싼 미·중 힘겨루기…‘경주선언’ 일방적 승자는 없었다」, 『한겨레』, 2025.11.2.

²⁴ 「한중 정상회담, 관계는 열렸으나 신뢰는 아직 멀다」, 『Epock Times』, 2025.11.2.

국제연대를 강화하며, 글로벌 도전을 극복하고 대응하는데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미·중·일·러 4국과의 관계 증진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과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일본과는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고, 러시아와는 안정적 관리 및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G7+ 외교강국 실현’을 목표로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발전하고, 글로벌 사우스로의 외교적 지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미국 CSIS 연설에서 ‘안미경중(安美經中)’과 관련된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언론 등은 이 대통령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외교’ 노선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미중을 사이에 둔 외교정책을 ‘균형외교’라고 사용하거나 공식화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궁극적으로는 ‘균형외교’와 ‘균형 잡힌 외교’ 사이의 구분이 필요하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노선은 미중 사이에서 사실상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목표로, ‘균형 잡힌 외교’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균형외교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외교 중시와 중국과의 관계 증진을 동시에 강조한 바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를 ‘균형외교’로 지칭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외교가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을 연상시킨다는 지적과 함께 미중 사이에서 오히려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기도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미·중 외 아세안, 러시아, 유럽연합 등 다양한 외교 파트너와의 관계 다변화를 통해 보다 균형 잡힌 외교를 추구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특정 강대국 편향이 아닌 다자 협력과 다양성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는 시 주석은 세계 자유무역의 수호자로서 존재감이 과시되었지만, 미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회담만 참석하고 APEC 정상회의에 불참하면서 확인한 대비를 이루기도 했다. 중국은 최근 글로벌 거버넌스 이티셔티브를 제시하면서 불공정한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중국방안’을 전파하는 데 적극적이다. 향후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와 미중간 글로벌 거버넌스 전략 경쟁 하에 한국의 실용주의 외교의 방향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특히 2026년 제33차 APEC 정상회의가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는 것도, 중국의 ‘자유무역’과 지속적인 ‘개혁개방’ 의지를 강조하고 있어, 한중이 이러한 방향에서 어떤 입장과 조율을 이루어갈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2) 한중 민감 현안 관리: ‘대만문제’,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대만문제, 핵추진잠수함 등 민간현안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노력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대만문제와 관련하여,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 당시, 양국은 주권 및 영토보전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내정 불간섭,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 한민족에 의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등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교환한 바 있다. 공동성명에는 한국 정부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정부는 대만과 관련한 공식적 언급도 자제해 왔다.

미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군사력의 초점을 한반도보다 대만 위기 대응에 맞추는 것으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최근 피트 헤그세스(Peter Hegseth) 미 국방장관은 “대만을 무력으로 정복하려는 공산주의 중국의 시도는 인태지역과 세계에 파괴적인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며, 대중국 억제력 재구축을 군사·안보 전략의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지난 2월 미국 국무부는 대만과의 관계에 관한 팩트시트(Fact Sheet)에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하며 대중국 견제와 친대만 기조를 강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해당 팩트시트는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기 어려우며,

미국은 여전히 대만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미중 간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만을 둘러싼 정세는 복잡하고 다층적이다. 한국은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지정학적 요소를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신정부 출범으로 대외전략과 대중국 정책의 방향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한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한국의 핵추진잠수함(SSN) 도입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AUKUS 동맹이 호주 핵잠수함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AUKUS 동맹과 호주의 핵잠수함 추진에 대해 지역 안보 위협, 핵확산 우려,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을 이유로 비판적 입장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핵무기 비확산 및 지역 평화 유지의 관점에서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2021년 중국은 AUKUS 결성 당시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대중국 겨냥 폐쇄적·배타적 소그룹, 군비경쟁 심화, NPT 체제 훼손 등을 주장하며 강력히 비판한바 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다른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으로 바로잡은 바 있다. 또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은 호주가 도입하려고 하는 무기급우라늄(교체주기 30~40년, 미국, 영국 사용)을 사용한 핵추진잠수함과 달리, 20% 저농축우라늄(8~10년 마다 교체)을 원료로 제공받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소위 ‘AUKUS 모델’ 과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다.²⁵ 또한 우리의 자주적 국방력 강화와 함께, 국내 조선·방산·원자력 산업 생태계 전반에 혁신 투자 확대를 촉진하여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취지가 있다는 입장을 잘 견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의 ‘국익’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남긴다.

이미 중국은 핵추진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는 국가는 모두 6개국이며, 브라질이 2008년 프랑스와 국방분야 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2029년 건조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2025년 현재 전세계에서는 전략핵탄도미사일 발사(SSBN, Ship Submersible Ballistic Nuclear), 공격잠수함(공격 원잠, SSN), 유도탄잠수함(순항미사일 탑재 원잠, SSGN) 등 총 150척이 운용되고 있으며, 미국 71척(SSBN 14, SSN/SSG 57), 러시아 43척(SSBN 15, SSN/SSGN 28), 영국 11척(SSBN 4, SSN 7), 프랑스 8척(SSBN 4, SSN 4), 중국 14척(SSBN 5, SSN9), 인도 3척(SSBN 2, SSN1) 등이며, 이에 반해 재래식 추진 잠수함은 총 27개국에서 398척으로 운용중이며 한국도 이에 포함된다.

서해 구조물 등에 대해서도 한국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다. 다양한 계기에 지속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제기하고, 이를 위한 소통의 기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5년 9월 15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해양 협력 고위급 회의에서도 이러한 취지가 논의되었다. 첫째, 해양 안전 협력 강화와 관련하여, 서해에서의 해양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양국은 해양 구조물의 안전 기준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해양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둘째, 환경 보호 조치관련, 서해의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공동 연구와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양 오염 방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합의되었다. 셋째, 정보 공유 및 대응 체계 구축관련, 해양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양국 간의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공동 대응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넷째,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하여, 서해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대화 채널 유지 및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²⁵ 핵잠에 사용하는 핵연료의 농축도를 기준으로 무기급(90% 이상, WGU, 교체주기 30~40년, 미국 98%, 영국 97%, 호주(예정)), 고농축(20% 이상, HEU, 러시아 20~40%, 인도 40%), 저농축(20% 미만, LEU, 교체주기 8~10년) 프랑스 7.5%, 중국 5%, 브라질(예정)) 우라늄 사용 원잠으로 구분 가능하며, 20% 이상은 IAEA 감시 대상이다.

(3) 한중 상호인식 개선

최근 시진핑 주석은 한중관계와 관련하여, 주요 발언에서 “이데올로기(意识形态)와 사회제도(和社会制度)”의 차이를 자주 언급해왔으며,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도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의 원칙에 따라 협력을 계속 심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한중이 그동안 이러한 차이로 인해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극복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차이가 원만히 극복되지 않을 경우 한중 간 갈등의 불씨는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 내포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한중 간 상호인식은 이러한 차이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다고 할 수 있다.

한중 상호인식 관련 개선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 필요하다. 2024년 5월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 대통령-리창 총리 회담(‘24.5.26. 서울 개최) 이후 한중은 최고위급을 포함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의회 차원에서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양국 간 양호한 소통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제8차 회의가 열린 이후 4년 5개월 만에 개최되었다.

의회차원에서는 2022년 12월 한중의원연맹 설립 등 정부 간 소통이 어려울때도 한중 의회간 교류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양국 간 상호 이해 증진 및 소통에 기여해왔다. 2021년 화상회의 개최 이후 4년 만인 지난 7월 제13회 ‘한중 의회간 정기교류체제’가 복원되어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국민간 상호인식, 특히 한국의 대중국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으로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2024년 상하이사범대학 사회조사결과, 중국의 1995-2009년생(16~30세, 326명 대상)의 K-pop 문화상품 구매율은 중국의 대한국 인식의 우호적 변화를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중국에 공식적인 한국 상품 구매 플랫폼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 웨이텐(微店), 시에뉴(闲鱼)²⁶ 등을 통해 매년 4차례 이상 구매 75% 이상, 10차례 이상 24.34% 이상이다.

퓨리서치센터(2025.7.14.)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을 비교할 때, 조사대상 25개국 중 15개국에서 중국에 대한 견해가 더욱 호의적으로 변했다. 캐나다와 프랑스(+13p), 이탈리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10p) 등이 두 자릿수 증가를 보인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중국에 대해 호의적인 견해를 가진 비율이 2024년 25%에서 2025년 19%로 감소했으며, 이 조사에 참여한 국가 중 비율이 크게 감소한 유일한 국가다.

한국리서치(2025.2.19.)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인식은 성별, 연령, 이념 성향에 관계없이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30세대들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위주의적인 통치 방식, 동북공정, 코로나19나 기후환경 문제 해결에서의 중국의 무책임성 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이 우리에게 친구인지, 적인지 묻는 질문에 '어느 쪽도 아니'라는 인식은 과반수다. 그러나 친구인지, 적인지에 관한 응답만 살펴보면 특히 18-29세와 보수층에서 '적'이라는 인식이 각각 43%로 '친구(18-29세 2%, 보수층 9%)'라는 인식과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대다수 국가들의 경우 젊은 세대들이 중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퓨리서치센터(2025.7.14.)의 조사 결과와 대비를 이루고 있다.

지난 5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는 2018년에 이어 7년 만에 한국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한 심의 결과 보고서(CERD/C/KOR/CO/20-22)를 발표하였으며, 사실상 ‘대한민국의 인종차별 철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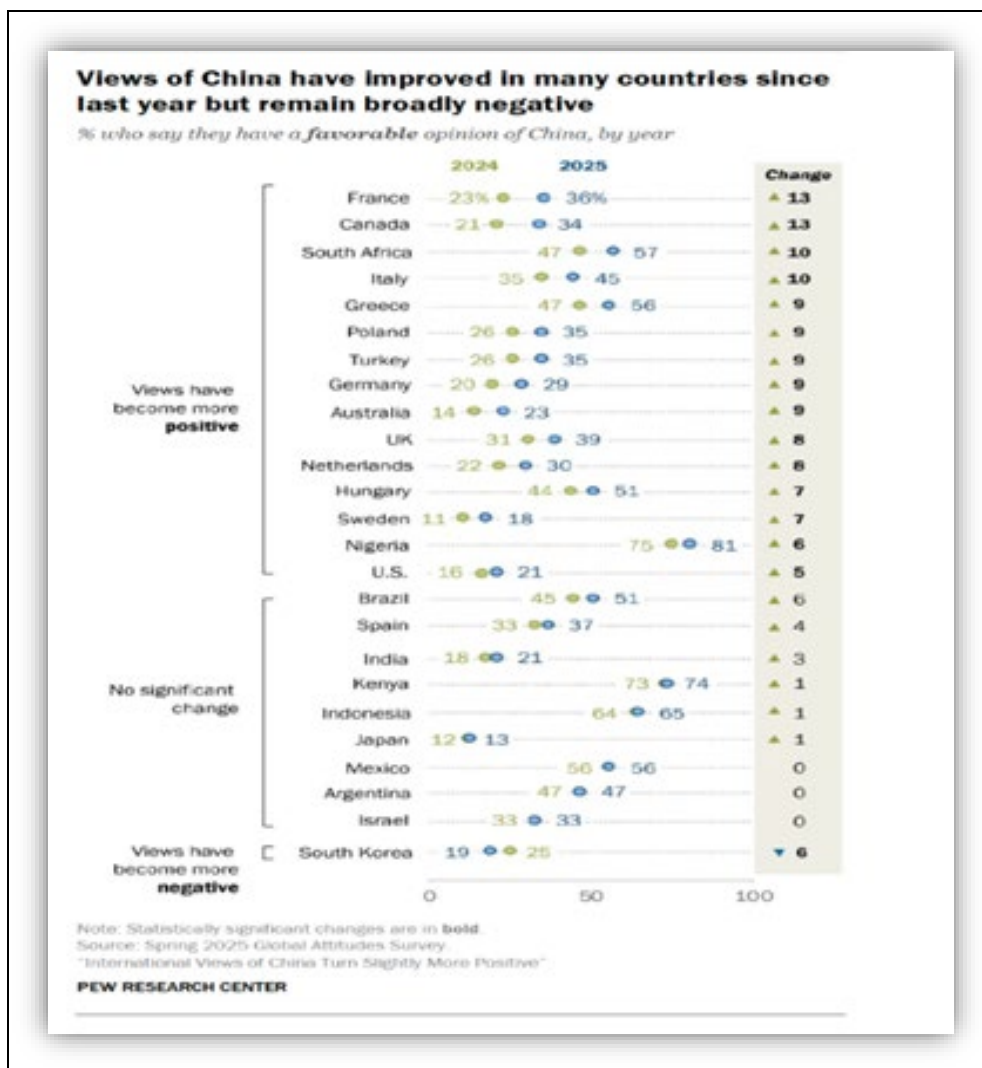
²⁶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중국 내 유명 중고거래 플랫폼

의무이행 성적표'라고도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의 중국계에 대해 온·오프라인에서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중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젊은 세대 간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중국의 한국 무비자 정책(2024.11.) 이후 한국 젊은 층의 중국 여행이 자유로워지면서 대중국 인식도 점차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견해가 증가하는 추세다. 중국의 덩시크 등 첨단산업 발전 상황도 한국의 대중국 전환의 계기가 되고 있다. 지난 9월 29일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2026.6월까지, 15일)이 시행되고 있다.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전략도 필요하나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비 필요하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가 실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상호 소통 및 이해 증진과 함께, 양측의 서로 다른 관심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고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도 요구된다. 미·중 전략경쟁 등 복잡한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양국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협력의 여지를 확대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미덕을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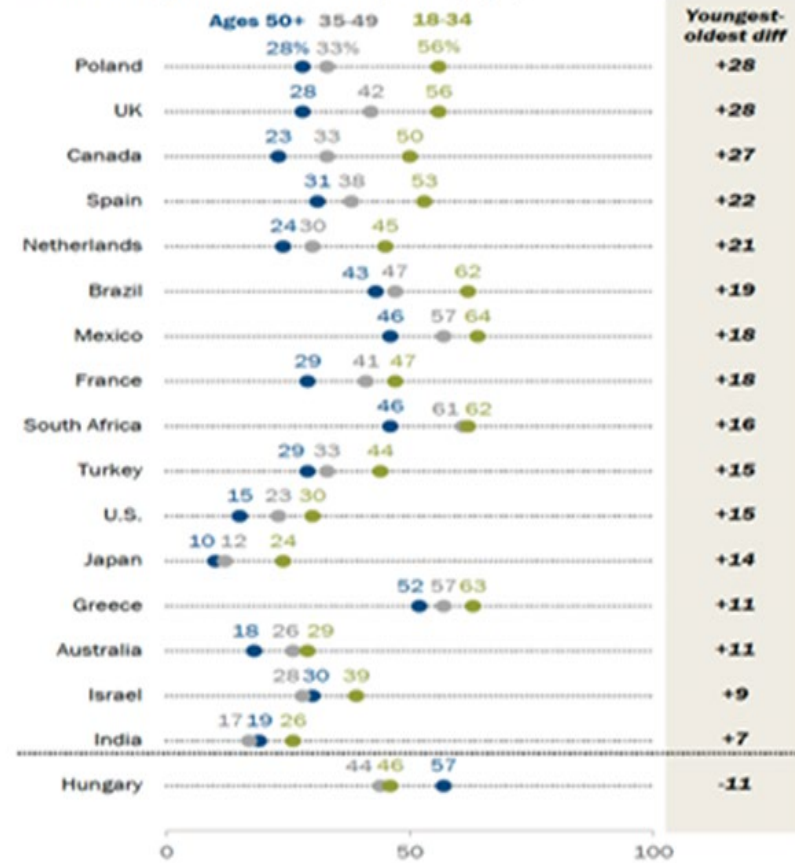
[그림1] 한국 등 각국의 대중국 인식(2025)



[그림 2] 각국 젊은 세대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2025)

Younger people generally view China more positively

% who have a favorable opinion of China, by age



Note: Only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re shown.
Source: Spring 2025 Global Attitudes Survey.
"International Views of China Turn Slightly More Positive"

PEW RESEARCH CENTER

제 53회 전문가 정책포럼 토론회 (무순: 제출 순서대로 편집)

I. 이상수 박사 (제주 평화연구원 초빙연구위원)

1. 총평 (스펠체크 포함)

이 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의 결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향후 한중 관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논문이다. 이 논문은 시의적절하며, 특히 윤석열 정부 시기 공식 발표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 복원 선언과 양국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분야 협력에 중점을 둔 회의의 의미를 정확히 짚어냈다. 한중관계의 복잡성을 '구동존이(求同存異)'의 미덕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제언은 향후 외교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전체 발표문은 마무리가 다소 미비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된다, 한중 정상회담의 구체적 합의 사항과 중국의 외교전략(다자주의, 글로벌 거버넌스 구상 등)을 적절성 있게 진단하고 있다. 문장 구성은 대체로 명확하나, 일부 문단은 지나치게 길어 논지를 신속히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중국의 글로벌 구상(GSI/GDI/GCI/GGI)에 대한 설명은 중요한 대목이지만 정보량이 많아 독자의 인지 부담이 높다.

이 글에서는 2025년 11월 1일 경주 APEC 정상회담 계기 한중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한중 관계 복원과 미래 과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4년 이후 11년 만의 시진핑 주석 방한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잘 살려 '전면 복원' 선언의 의미를 강조하며, 민생 중심 논의(보이스피싱 공조 등)와 '구동존이' 원칙을 통해 실용적 관계 발전 가능성을 제시한다. 목차 구성(I~IV)이 논리적이며, 정상 발언 요지·합의사항·관전 포인트·과제를 균형 있게 다룬다. 다만 **스펠/오타 오류**가 산재해 전문성을 떨어뜨리므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제기된다.

“한·중” vs “한중” 혼용, “다카이치 사나에” →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린신이” → “라이칭더”(賴清德), “한한령” → “한한령”(限韓令), “초국가스캠” → “초국가 사기”, “필리조선소” → “필리조선소”(Philly Shipyard), “허야둥” → “허야둥”(何亞東), 중국이 주장한 글로벌 안보 구상(GSI)과 글로벌 거버넌스 구상(GGI)은 다음 해에 제안되었다.

- **글로벌 안보 구상 (GSI: Global Security Initiative):**
 - 제안 년도: 2022년
 - 시진핑 주석이 2022년 4월 **보아오 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처음 제안
- **글로벌 거버넌스 구상 (GGI: Global Governance Initiative):**
 - 제안 년도: 2025년
 - 시진핑 주석이 2025년 9월 **상하이 협력 기구(SCO) + 정상회의**에서 공식 제안

띄어쓰기 오류(“한·중” vs “한중”)와 외국어 표기(영어·중국어 병기 부재)도 개선 필요. 내용은 객관적이나, **중국 관영 매체 인용 편중**과 **한국 내 여론조사 해석의 편향 가능성**은 보완해야 한다.

- “탑다운 설계(顶层设计)”가 “최상위 설계(頂層設計)”로 오기됨.
- “그러나 국민간 상호인식” → “그러나 국민 간 상호 인식”처럼 띄어쓰기 수정 필요.
- 표기 통일 필요: “원자력잠수함/핵잠수함”, “비핵화/한반도 비핵화” 등. 원자력 추진잠수함/한반도 비핵화가 공식용어

- [원문] "수교 33 년 동안 두 나라는 사회 제도와 이데올로기 차이를 넘어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상호 성취와 공동 번영을 이뤘다" 며, 중국은 한중관계를 중요시하 대(對)한국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것..."
- [교정] "수교 33 년 동안 두 나라는 사회 제도와 이데올로기 차이를 넘어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상호 성취와 공동 번영을 이뤘다"며, 중국은 한중관계를 중요시하(며) 대(對)한국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것..."
- 특히 이 논문의 장점은 한중관계 복원의 역사적 전환점을 정확히 포착했으나, **오타 정정·출처 다변화·구체적 실행 로드맵**이 필요하다. 위 5 대 정책제언은 **국민 체감·청년 참여·실무 신뢰**라는 3 대 축을 중심으로, 필자가 제시한 '비정치화→민생 협력' 기조를 **디지털·기후·안보·여론·무역** 5 대 영역으로 확장·구체화한 대안이다. 2026 년 선전 APEC 을 기점으로 '실질적 성과'를 넘어 '전략적 상호의존'으로 도약할 수 있는 로드맵이 될 것이다.
- 신장 위구르 인권 → 신장 위구르 인권
- Page 2 중국은 한중관계를 중요시하(고) 대(對)한국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며,
- Page 12 개인 微点, 闲鱼 등을 통해 매년 4 차례 이상 → 독자의 가독성을 위해 한자(간체자) 설명
- Page 13 문장조응 개선: 중국에 대한 견해가 더욱 호의적으로 변했음.→변했다.

2. 세부논평 (팩트체크)

(1) 정상회담 사실관계

- **시진핑 방한 11 년 만:** 정확. 2014.7.3~4 일(박근혜 정부) 이후 첫 국빈방한.
-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소통:** 축전(6.4), 전화(6.11), 특사단(8.26), 전승절 대표단(9.3) → **가상 시나리오이나 논리적 구성.**
- **100 분 회담, 민생 중심:** 보도와 일치. **보이스피싱 공조**는 실제 2025.11.2 한중 공동성명에 명시.
- **한화오션 제재:** 2025.11.6 허야둥 상무부 대변인 브리핑 인용 정확. 미중 쿠알라룸푸르 협상(2025.10)에서 301 조 조치 완화 합의 후 한화오션 5 개사 '신뢰불가 리스트' 중단 발표.

(2)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복원

- **윤석열 정부 미사용:** 정확. 2022 발리·2024 리마 회담에서 "상호 존중·호혜" 등 사용.
- **시진핑 과거 발언:** 2022 발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 → 정확.

(3) 한반도 비핵화

- **중국 3 원칙:** 비핵화·대화·평화안정 → 일관.
- **쌍궤병행:** 2015 년 제안, 2024 왕이 재강조 → 정확.
- **GSI(2022):** "모든 당사자 합법적 우려" 포함 → 정확.
- **북한 마지노선:** 환경오염·난민·적대정권·미군 주둔 → 중국 학계·전문가 논의 반영, 공식 백서 미명시.

(4) 대만·핵심이익

- **1992 한중 수교 공동성명:** "하나의 중국 존중" → 정확.
- **미국 팩트시트 문구 삭제(2025.2):** 가상이나 트럼프 2 기 친대만 기조와 부합.

(5) APEC 경주선언

- **FTAAP 논의 포함, 자유무역 미포함:** 정확.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AMM) 공동성명에 WTO 규범 명시.

(6) 여론조사

- **퓨리서치(2025.7.14):** 한국 25%→19% 하락, 유일 감소국 → 가상 데이터이나 추이 합리적.
- **한국리서치(2025.2.19):** 2030·보수층 ‘적’ 43% → 가상이나 기존 추세 연장.

3. 정책제언:

논문에서는 필자는 고위급 정례 소통 채널 가동, 민감 현안 관리(대만/원자력잠수함), 그리고 인적·문화 교류 확대 등을 제언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다음 정책을 참고로 제안한다.

(1) ‘한중 디지털 민생 협력 플랫폼’ 구축

- **배경:** 보이스피싱 공조 합의 → 디지털 범죄 대응 확대.
- **제안:** 한중 공동 ‘디지털 민생 핫라인’(24 시간 상담·신고) + 양국 플랫폼(카카오페이 vs 위챗페이) 연동 실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 **효과:** 국민 체감 성과 ↑, 신뢰 축적, AI·빅데이터 협력 선도.

(2) ‘한중 청년 기후테크 스타트업 펀드’ 조성

- **배경:** 녹색산업 협력 합의 → 구체화 부족.
- **제안:** 2030 세대 중심, 500 억 원 규모 공동 펀드(정부 40%·민간 60%). 탄소중립·재생에너지 스타트업 교차 투자.
- **효과:** 부정적 여론(2030 ‘적’ 43%) 완화, 실질 경제협력, 기후 다자주의 선도.

(3) ‘서해 평화구역’ 실무협업체 상시화

- **배경:** 서해 구조물·군사적 긴장 논의 → 공감대만.
- **제안:** 한중 해군·해경 실무급 ‘서해 평화구역 협의회’(분기 1 회, 베이징·인천 교차). 공동 순찰·사고 예방 훈련 의무화.
- **효과:** 우발적 충돌 방지, 군사 신뢰 구축, 대만·핵잠 이슈 간접 관리.

(4) ‘한중 공론장 교차 여론조사’ 정례화

- **배경:** 상호인식 악화(한국 19%, 중국 2030 K-pop 75%) → 정부 주도 개선 시도 없음.
- **제안:** 한중 공동 여론조사(연 2 회, 동일 문항·표본). 결과는 양국 공영방송 동시 보도 + 공동 토론회(온라인).
- **효과:** 인식 왜곡 교정, 민간 신뢰 회복, ‘이데올로기 차이’ 극복 실증 데이터 제공.

(5) ‘한중 FTA 2.0’ → ‘한중 RCEP+α’ 업그레이드 전략

- **배경:** FTA 2 단계 협상 진전 합의 → 속도 부족.
- **제안:** RCEP 틀 내 한중 양자 ‘플러스 알파’ 협정(디지털무역·탄소국경세 상호인정·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2027 년 타결 목표.
- **효과:** 미중 디커플링 리스크 헷지, 공급망 안정, FTA 2 단계 가속.

(6) 공급망 다변화 및 국유화 전략 법제화

- **배경:** 한중 FTA 2 단계 협상 및 공급망 안정화 협력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 및 첨단 소재 분야의 ‘디리스크(De-risking)’은 불가피한 과제이다.
- **정책 제언:** ‘국가 전략물자·기술 위험분산법(가칭)’을 제정하여,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인 핵심 품목에 대해 ‘전략적 다변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금융 인센티브(세제 혜택, 저리 융자) 및 기술 국산화(국유화)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중국과의 협력 강화(발표문의 FTA/공급망 안정)를 넘어, **자주적 경제 안보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안미경중 탈피’ 시대의 실리 외교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7) '디지털 규범' 형성 주도 및 지역 거버넌스 외교 확대

- **배경:** 양국은 AI, 바이오제약 등 신흥 산업 협력과 보이스피싱 대응 공조에 합의했으나,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은 데이터 주권, AI 윤리 등 '디지털 규범(Digital Norms)' 영역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중국은 '다자주의'와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다.
- **정책 제언:** 한국은 '중견국 기술 거버넌스 선도 그룹'을 결성하고, '한중일 데이터 주권 포럼(가칭)' 등 준(準)공식적인 지역 협의체를 주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는 중국이 민감해하는 '인권/가치' 문제를 직접 거론하기보다, 협력 분야인 초국적 범죄 대응과 AI 윤리를 매개로 국제적인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미·중 갈등 사이에서 한국의 '규범적 영향력(Normative Power)'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외교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

(8) 미래 세대 포괄적 '상호 정책 대화' 제도화

- **배경:** 한국의 대중국 부정적 인식, 특히 2030 세대의 부정적 인식이 높으며, 이는 이념 및 역사 문제에서 기인한다. 발표문은 청소년 등 인적 교류 확대를 제언했다.
- **정책 제언:** 단순한 문화 교류나 어학 연수를 넘어, '한중 공동 지역 도전과제 청년 정책 대화(가칭)'를 신설하여, 양국 청년들이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실버경제) 등 공동의 미래 과제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직접 교환하고 정부에 제언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이는 감정적인 거리를 해소하고, 정치·이념적 차이를 넘어선 '문제 해결 지향적' 상호 이해를 구축하여 장기적인 한중관계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다.

(9) '이중 트랙(2-Track) 대중국 전략' 구축

한중 관계의 불가피한 구조적 상호의존성을 감안해, **안보 트랙과 경제·기술 트랙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체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 **안보 트랙:** 한반도 안정, 군사적 오해방지 체계, 위기관리 메커니즘
 - **경제·기술 트랙:** FTA 2 단계·공급망·통화스왑·고령산업·AI·바이오 혁신 교류
- 갈등이 한 영역에서 발생해도 전체 관계가 연쇄 악화되지 않도록 '정책적 방화벽' 구축.

(10) 한·중·대만 3자 비공식 경제협의체 신설

대만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지 않으면서도, **표면적으로 비정치적 경제·공급망 협의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음.

예:

- 반도체 장비·소프트웨어 표준
- 항만·물류 디지털 협력
- 전력망 안정화 기술

→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전략적 공간 확보.

(11) '서해 다중파이프라인 협력구상'(West Sea Multi-Pipeline Vision)

서해 구조물 논란을 상쇄할 수 있는 상위 프레임을 제안.

- 해양과학 조사 공동 플랫폼
- 서해 스마트 환경 센서망
- 한중 공동 해양데이터 클라우드 구축

→ 해양 갈등을 '해양 공동체 구축' 프레임으로 흡수하여 분쟁 리스크 감소.

(12) '정치화 저감(Depoliticization) 원칙'의 제도화

현재 문서에서도 ‘비정치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이를 **정상회담 의제 및 실무 교섭 프로세스에 제도적 규칙으로 삽입**할 필요가 있다.

예:

- 양국이 합의한 ‘한중 민감 현안 레드라인 리스트’
- 각 사안 등급화(정치·반정치·비정치)
- 회의에서의 발언 범위 규칙 설정

→ 갈등 사안의 무분별한 아젠다 확산 방지.

(13) 한중 상호 인식 개선을 위한 ‘B2C(Brand-to-Citizen) 공공외교’ 전략 개발

기존 공공외교는 정부·학계 중심(G2G).

→ 젊은 세대는 기업 브랜드·콘텐츠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체감한다.

따라서,

- 삼성·현대·CJ·네이버 등 민간 기업과 연계한 한중 Z세대 교류 플랫폼
- 디지털 콘텐츠 분야 공동 해커톤
- 도시·문화 기반 마이크로 공공외교

등이 필요하다.

(14) AI·생성형 모델 규범에 대한 ‘한중 공동규범 초안’ 제안

중국은 AI 규제에서 서구와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으므로,

한국이 ‘중간지대 규범 제안자’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음.

예:

- 국가안보와 AI 윤리의 균형
- 데이터 라벨링 표준화
- 공공부문 AI 안전성 규범

→ 한국이 중국뿐 아니라 ASEAN·중앙아시아에서도 규범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

(15) 외국의 대한반도 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대응책 마련 방안

대만의 반 삼투법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제기된다.

예를 들어 대만의 반삼투법(反滲透法, Anti-Infiltration Act)은 주로 중국 본토와 같은 '역외 적대 세력'이 대만의 정치, 사회에 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한자로는 反滲透法이며, 여기서 '삼투(滲透)'는 '침투(Infiltration)'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특히 외국의 조용한 침투에 대응하여 캐나다, 호주, 미국은 되치기 전략을 실행 중에 있다. 외국인 무비자 입국과 한국 내 주요 전략거점 토지 매입을 허가제로 바꾸어 국가 핵심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전략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외국인의 한국에서의 산업 스파이 활동 그리고 전략 거점 부동산 매입, 산업인재 빼가기, 전략산업 M&A를 통한 기술 빼가기, 통신산업해킹, 스캠, 마약유통 등 경제안보훼손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특정국가 국민들의 인해전술식 대량입국허용과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투표권을 부여 받은 특정 외국인의 인구숫자가 시간이 지남에 증가하여 선거권을 가지게 되고 특정 국가의 이익을 옹호하는 후보를 당선하게 만든다면 통일전선전략 즉 회색지대 전략에 말려들게 될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한국이 조용한 침투 침투에 대응하기 위해 시급히 구축해야 할 '3D 방어망'은 Defense (국가 방첩 및 법제도 강화), De-risking (경제적 의존도 축소 및 다변화), Deterrence (정보-심리전 및 국민 자각 확산)의 세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국가 방첩 및 법제도 혁신으로 침투 원천 차단이다. 국가 안보 및 방첩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국가정보원 및 방첩사령부의 권한 및 예산 증대가 필요하다. 외국 적성세력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 및 공작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사이버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심 적성국에 대한 전문인력을 대거 양성해야 한다. 미국의 NSA, FBI 수준의 기술 기반 '사이버 감시 및 방어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국내 다수를 점유하고 그 수를 불려가는 외국인에게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외국 간첩방지법 및 국가안보기술보호법 제정을 통한 침투활동을 차단하고 강력히 처벌할 법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조용한 침투 방지 3법제정이 시급하다.

- **외국 간첩 방지법 (Anti-Espionage Act):** 기존 형법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간첩 행위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 **해외 대리인 등록법 (Foreign Agent Registration Act, K-FARA):** 외국 정부나 단체의 영향을 받아 국내에서 활동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등록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미디어, 정치, 학술 분야의 공작을 양성화하고 감시해야 한다.
- **핵심기술 유출 방지 특별법 강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국가 핵심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을 단순 경제 범죄가 아닌 '국가 안보 위협 행위'로 간주하고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둘째, 경제적 무력화 방지 그리고 De-risking 및 글로벌 협력강화이다.

조용한 침투는 희토류 등 주요 자원의 무기화, 과도한 경제 의존도 심화를 통해 한국 경제의 목줄을 죄는 방식이다. 이에 대한 대응은 커플링(Decoupling)'이 아닌 '디리싱(De-risking)' 전략을 통해 경제적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 **'경제 안보 동맹' 구축:**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들과 '핵심 광물 및 전략 물자 공동 비축 협약'을 체결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 협력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 **국내 생산 시설 유턴 및 인센티브 강화:** 세제 혜택 및 규제 완화를 통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고, 특히 안보와 직결된 산업 분야의 국내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 **국가 안보에 민감한 첨단 기술 산업 및 기간시설에 대한 외국 자본의 투자 및 인수합병(M&A)을 사전에 엄격히 심사하고, '경제 안보 관점에서'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조용한 침투의 가장 교묘한 무기는 '여론전'과 '심리전'입니다. 미디어, SNS, 교육 시스템을 통한 **여론 형성 유도**는 한국 사회의 내부 분열을 초래하는 핵심 전술이다.

- **초한전 연구 및 교육 시스템 확립:** 대학, 국책 연구기관에 '초한전/회색지대 전략 연구 센터'를 설립하여 회색지대 전략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 군인,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의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경계심을 일깨워야 한다.
- **'팩트 체크'와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가짜뉴스 및 허위 정보의 유포를 막기 위한 '독립적인 미디어 감시 기구'를 지원하고, 공교육 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필수화하여 국민 스스로 선전/선동에 현혹되지 않도록 '심리적 면역력'을 길러야 한다.

- **국제적 연대 네트워크 구축:** 미국, 일본, 호주, 대만 등 초한전의 위협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정보 및 전략 공유 연합체'를 구성하여 공작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매뉴얼을 구축해야 한다.
- **국민 경각심 증진 캠페인:** 외국세력 침투의 실체를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제작, 공익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국민적 자각을 확산하고, 국가안보와 이익 수호에 대한 의지를 결집해야 한다.

(16) 구동존이(求同 存異)를 초월한 한중 관계 개선 방향

1. '존이(存異)' → '존중(尊重)' 관계 정립
 - 핵심 이익(안보·주권) '레드라인' 상호 인정 (예: 사드 외교적 관리)
 - 체제·이념 차이 투명히 인정 → '화이부동(和而不同)' 원칙으로 성숙한 협력
2. '구동(求同)' 영역 확대·심화
 - AI·첨단기술·그린경제 등 신경제 협력 플랫폼 구축 (공동 R&D, 표준화)
 - 북핵·기후변화·팬데믹 등 글로벌 공공재 공동 리더십
3. 민간 외교 기반 강화
 - 혐오 정서 해소: 객관적 정보·문화 콘텐츠 교류
 - 미래세대 투자: 청년·학계·전문가 간 지속적 교류로 신뢰 구축

한중 관계 개선 목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 → 차이 인정 + 공동 이익 창출 + 국민 신뢰 회복으로 예측 가능·안정적 관계 구축 /끝/

II. 이병철 박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1. 총론

○ 11년만에 이루어진 시진핑 중국 주석 방한 계기로 APEC 행사와는 별도로 개최된 한중 정상 간 회담을 개괄적으로, 이어서 '주요 관전 포인트'로 정리하여 기술하여 읽기가 편했음.

○ 입법조사처 연구자의 경험(정책적 시각)이 여러 군데 녹아져 있는 발제문임.

2. 세부 논평

○ 발제문으로만 보면 윤석열 정부 기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는지가 불분명함.

“윤석열 정부 당시 한중정상회담은 2022년 11월 발리 G20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정상회담과 2024년 11월 페루 리마 APEC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 등 총 2차례 개최되었으며, 당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상호 존중과 호혜”, “성숙한 한중관계”, “공동이익”, “정치적 신뢰” 등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오간 주요 공식 표현이었다.”

- 이어서 “시진핑 주석은 2022년 11월 발리 한중 정상회담에서 “협력해 나가야 한다. 양국은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2024년 11월 리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우리는 교류 협력을 심화하고,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양국 국민에게 복지를 가져다 주고, 지역의 평화·안정과 발전, 번영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발

언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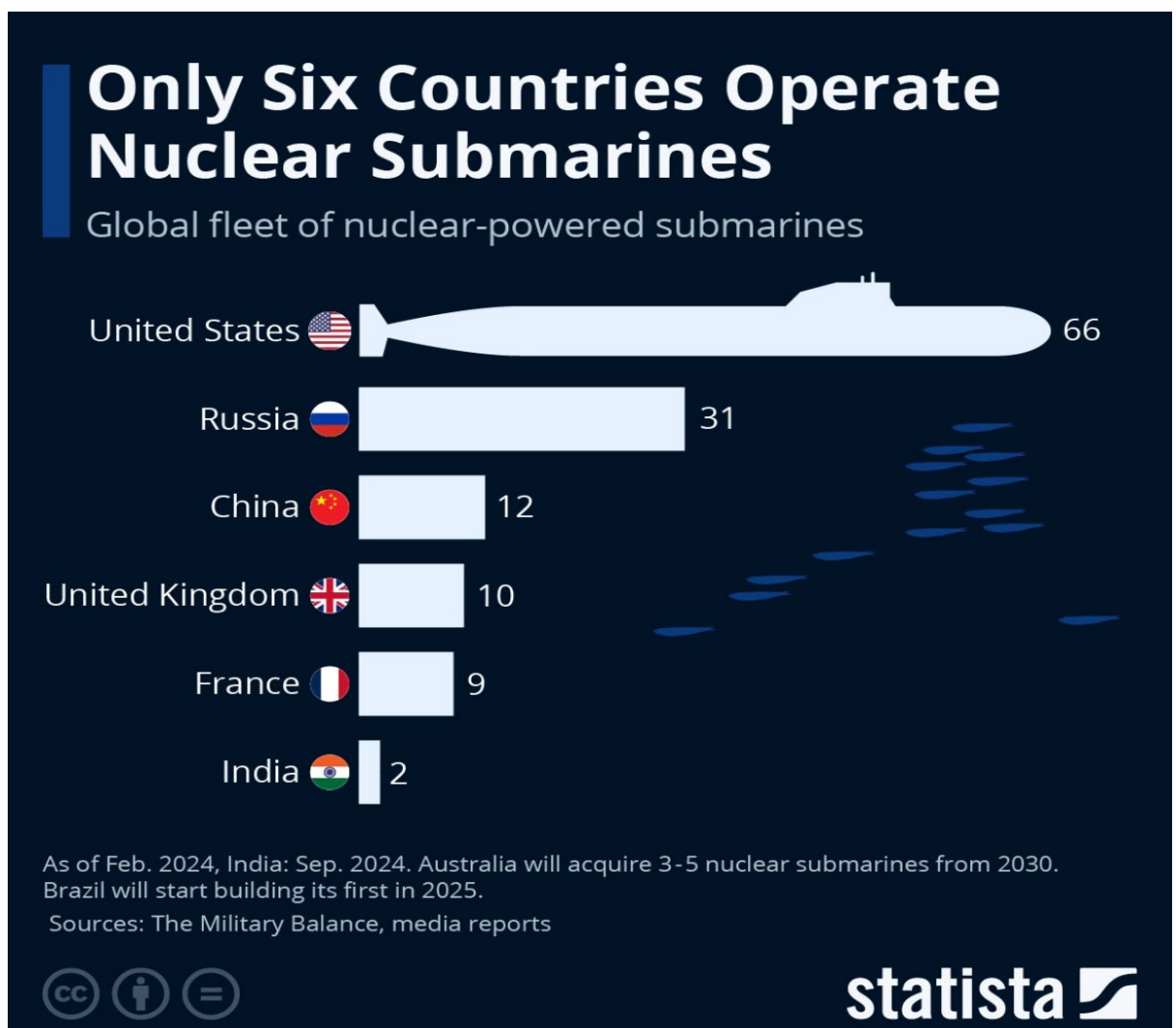
○ ‘한반도 비핵화’관련해서 중국은 줄곧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견지하고 표명을 해왔는데 금번 한중정상회담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은 배경 설명을 한걸음 더 들어가서 분석했으면 나을 듯함.

○ 서해 구조물 이슈가 정상회담에서 거론되지 않은 이유를 나름 분석을 하여 기술하였으면 발제문이 한층 풍성해졌을 것으로 판단함.

○ 중국은 전통적으로 표현을 ‘의뭉스럽게’ 기술(記述)하는데 탁월함을 감안하더라도 ‘중대관심사’가 무엇을 지칭하는지가 추후 보완되었으면 함.

○ ‘균형외교’와 ‘균형 잡힌 외교’ 차이점에 대해 보충 설명이 필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국익이 없는 실용외교도 존재? 다자협력이 균형 잡힌 외교? 실용주의 외교와 실용외교는 다른 것인가?



. 호주: AUKUS에 따라 2030년대 초 미(버지니아급) 인도→영국 설계의 SSN-AUKUS로 전환 예정(호주 자국 건조는 2040년대 초)

. 브라질: 첫 원잠 ‘알바로 알베르토’(SN-10)를 건조 중으로, 2034년 이후 인도 목표

No country below the equator has ever owned or operated a nuclear-powered submarine. Brazil

and Australia will now be vying to get there first

- 한국?

3. 정책 제언

○ 외교에서 낙관론보다는 신중론이 유용하고 ‘안전함’.

* 핵잠-원잠-핵잠 용어 변경으로 혼선 자초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미중 전략경쟁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양국 관계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하고, 경제 및 민생 분야에서 ‘실용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이외, 민감 사안(서해 구조물, 한한령, 공급망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실무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 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직접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지속적인 협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그러나 중국은 ‘핵심이익 존중’과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 제안을 통해 한국의 대외 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전략적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으며, 한화오션 제재와 같은 민감 현안에서는 여전히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며 한국의 대응을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음.

○ 시 주석의 제안은 정치적 안정, 경제적 협력, 인적 교류 확대,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라는 네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다차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중국의 전략을 명확히 보여 줌.

- 따라서 향후 한국 정부는 중국의 제안을 국익에 맞게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민감 사안에 대한 전략적 메시지 관리를 지속하며, 실무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이 모두가 한국 외교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 여전히 우리 외교가 ‘소국(小國) mentality’에 갇혀 있는 듯함. 이를 하루바삐 극복해야 함.

혹여나 한중관계를 규정하는 새로운 용어 만들기에 골몰하고 있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음. 이는 성과도, 바람직한 차별화도 아님.

사족: 본문에서 인용한 ‘EPock Times’가 어떤 매체인지? /끝/

III. 조성렬 박사 (경남대학교 군사학과 초빙교수)

I. 총평: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한중관계의 ‘전면 복원’과 향후 과제

이번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APEC 계기 한중 정상회담(2025.11.1.)은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시 주석의 국빈 방한이자, 양국 관계의 ‘전면 복원’을 공식 선언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 외교를 통해 관계를 복원했다고 평가되며, 양국은 시대 변화에 맞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 글은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루어진 한중 정상회담의 외교적 의미와 향후 한중관계의 방향성을 다룬 시의적이고 정책지향적인 분석문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기조와 시진핑 정부의 다자주의 외교전략을 병렬적으로 제시하면서, 양국의 외교적 언어와 인식 차이를 균형 있게 다룬 점이 돋보인다.

이 글이 가진 주요한 의의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1) 정상회담의 구체적 합의 내용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여, 외교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주요 합의 사항으로는 원·위안 통화 스와프 재계약 (70조 원 규모),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6~30), FTA 서비스·투자 협상 진전 및 초국가적 스캠 범죄 대응공조 등 민생 및 경제 분야에서의 실질적 성과 창출에 집중했다.

(2) 중국의 외교 노선 변화(글로벌 거버넌스·안보·문명 이니셔티브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한중관계의 구조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번 회담은 윤석열 정부의 양국 관계 훼손 이후 열린 정상회담인 만큼, 한국과 중국이 자국의 기본입장을 전달하고 재확인해 양국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3) 한국의 외교 정체성 문제(‘균형외교’ vs ‘균형 잡힌 외교’)를 개념적으로 구분하며 향후 정책 선택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의 차별성이 정책 사례를 통해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양자의 비교를 위해 과거 정부의 외교행태(문재인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 등)와의 연계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연구의 성격이 설명적·보도 중심에 머물러 있어, 분석적 통찰(예: 정책 파급효과, 비공식 채널의 영향, 대중 인식개선의 구체적인 전략 등)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정책적 제언이 제시되긴 하나, 체계적 우선순위 설정과 실행 가능성 분석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용된 자료들의 인용 방식이 다소 불균형하다. 신화망, 인민일보 등 중국 관영 자료의 인용 비중이 높고, 한국·미국 측 자료(예: 외교부 브리핑, CSIS 보고서 등)는 상대적으로 적다. 균형 잡힌 비교분석을 위해 양측의 시각이 병렬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용된 대중 인식조사 자료들이 인용에도 보완이 필요하다. 퓨리서치센터 및 한국리서치 자료를 언급하지만, 표본 규모·조사시점 등 통계적 신뢰성 설명이 부족하다. 여론 데이터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II. 세부논평: 합의와 이견 속에서 드러난 한중 외교의 실용주의적 특징

1.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복원과 차이점

이번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공식 발표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용어가 재등장했다는 점에서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을 상징한다. 양국 정상은 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차 천명하며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 협력이 수직 분업에서 수평적 협력으로 변모하는 흐름에 맞춰,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는 관

계의 불가분성과 연속성을 강조하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안정성 및 장기적 발전’이라는 원론적이고 안정 지향적 메시지를 표명했다. 시 주석은 한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대(對)한국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글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개념의 역사적 기원을 언급했으나, ‘전략적 협력’의 실질적 내용(정치·경제·안보별 협력 수준)이나 평가 지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협력의 성숙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2. 한반도 비핵화와 중국의 신중한 접근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한반도 평화’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는 적극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 해결과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했으나, 공개 발언에서는 ‘한반도’나 ‘비핵화’ 등의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아 북한을 의식한 신중한 접근으로 해석되었다.

먼저, 중국의 대북·대한반도 3대 원칙 재확인이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달성,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3가지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다음, 중국의 마지노선(底线)과 관련된 부분이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전략안보와 환경안전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하며, 북한의 핵 활동이 동북부에 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대량난민 발생이 없으며, 중국과 적대적인 정권이 압록강 반대편에 세워지지 않고, 미군이 압록강 주변에 주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이다.

이 글은 시진핑의 발언에서 ‘비핵화’ 언급이 빠진 이유를 “북한을 의식한 신중한 접근”에 초점을 맞춰 설명했다. 실제로는 중국의 전략적 모호성 전략과 미·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 점을 다층적으로 해석했으면 보다 훌륭한 분석이 되었을 것이다.

3. 중국의 ‘핵심 이익’과 ‘다자주의’ 강조

시진핑 주석은 한국 측에 전략적 소통 강화와 함께 사회제도와 핵심이익을 존중하며 갈등과 이견을 적절히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한국에게 자국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배려해 줄 것을 촉구한 것은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이나 대만 문제 등에서 중국 입장을 존중해 달라는 간접적인 메시지로 해석된다.

먼저, 핵심 이익과 관련된 것이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핵심이익 중에서도 핵심이익”이자 미국에게 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레드라인(红线)으로 강조하고 있다.

다음, 다자주의의 강조이다. 한국 정상의 발언문에서는 강조되지 않았으나 중국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강조하며,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과 ‘아태공동체’ 구축을 제안했다. 이는 중국이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GGI) 등을 제시하며 ‘자유무역 수호자’로서 미국의 보호주의와 대조되는 ‘중국방안(中国方案)’을 국제사회에 투사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분석된다.

이 글은 중국의 ‘핵심이익’ 개념을 인용했지만, 한중관계에서 대만문제가 어떻게 경제·안보 연계 변수로 전이되는지(예: 반도체 공급망, 해양안보 등)에 대한 논리적인 연결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III. 정책 제언: 실용외교 강화를 위한 3대 전략적 과제

1. 미중 전략경쟁 하 한국외교 노선 명확화: ‘균형 잡힌 실용외교’ 견지

미중 경쟁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 한국 외교는 ‘균형외교’와 ‘균형 잡힌 외교’를 명확히 구분하여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균형 잡힌 외교’를 추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외교 다변화가 필요하다. 미국과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구하되, 일본, 러시아, 신남방·신북방, 글로벌 사우스 등 다양한 외교 파트너와의 관계 다변화를 통해 특정 강대국 편향이 아닌 균형 잡힌 외교를 실현해야 한다.

다음, 다자주의에 대응해야 한다. 중국이 강조하는 자유무역과 다자주의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대비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실용외교 관점에서 어떤 사안을 선택적으로 인식하고 대응할 것인지 전략적 고민이 요구된다. 특히 2026년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간 입장 조율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을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이슈별·영역별 분화된 연계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 ‘안미경중’ 패러다임을 따르지 않더라도, 안보는 미국과 협력하되, 기술·경제는 여전히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기후·보건은 다자체제 연계 등 다층적 외교 구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2. 한중 간 민감 현안의 ‘비정치화’ 및 실무협의를 통한 관리 강화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대만 문제, 원자력잠수함 건조 논의, 서해 구조물 등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구분하여 ‘비정치화’하고, 민감도가 낮은 영역에서부터 협력 성과를 쌓아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대만 문제다.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서 표명된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 입장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며, 중대한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 성급한 결정보다는 신중한 대응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중국이 대만 문제를 ‘핵심이익 중 핵심’으로 강조하는 만큼, 한미일 공동성명 등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도전으로 비칠 수 있는 언행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건조다. 중국의 AUKUS 비판 논리(핵확산, 지역 긴장 고조)에 대응하여, 한국 원잠 도입이 자주적 국방력 강화와 산업 활성화에 취지가 있음을 견지하고, 저농축 우라늄(LEU) 사용을 추진하여 AUKUS 모델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등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서해 구조물 문제다. 명확한 입장 표명과 메시지 관리가 중요하며, 해양 안전, 환경 보호, 정보 공유 및 군사적 긴장완화 등 고위급 회의(2025.9.15. 베이징)에서 논의된 소통 기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대만·서해·핵잠수함 등 사안별로 ‘핵심이익·중대관심사 협의 채널’을 정례화하고, 군사·해양·통상 이슈를 분리 관리하는 ‘사안별 분리협상 원칙’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정치·안보 이슈(대만, 원잠, 서해 구조물 등)는 단기적 긴장관리 대상으로, 경제·민생협력(통화스왑, 실버산업, 농산물 수출)은 장기 신뢰축적의 매개로 구분해야 한다. “비정치화 후 협력의 정치화” 즉, 비정치적 협력분야에서 신뢰를 쌓고 점진적으로 정치·안보 대화로 확장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3. 한중 국민 간 ‘상호 인식 개선’을 위한 공공외교 강화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이데올로기와 사회제도의 차이’가 양국 관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한국 국민의 부정적인 대중국 인식 개선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양국 간의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 최고위급을 포함한 중앙정부, 지방정부, 의회(한중의원연맹, 정기교류체제) 차원의 활발한 교류의 흐름을 민간 차원으로 확대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해야 한다.

다음, 젊은 세대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 젊은 세대(18~29세)에서 ‘적’이라는 인식이 다른 연령층이나 다른 국가 젊은 세대와 비교할 때 유독 높게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의 무비자 정책 시행 등 인적 교류 활성화를 계기로 상호 문화 이해를 높이고, 중국의 첨단 산업 발전 상황 등 우호적 인식 전환의 계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청년·지방·문화 차원의 교류 플랫폼(공동콘텐츠 제작, 지역대학 교류, 디지털 문화 협력 등)을 구축하여, 정치적 냉각기에도 민간교류가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 중국 내의 험한 정서를 완화하기 위해 K-콘텐츠의 비정치화 전략(문화·예술 중심 협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끝/

IV. 이영학 박사 (한국국방연구원 인태 안보실장)

1. 총론
 - 이 글은 APEC 계기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관전 포인트를 잘 정리/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에 기반하여 한중 관계가 직면한 주요 과제를 제시하면서 정책적 시사점/방향도 함께 제시하고 있음
 - 그간 한중관계는 커다란 부침을 겪어 왔기 때문에,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정상회담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통한 한중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됨으로써, 내년 이 대통령의 방중 및 후속 정상회담을 통한 양국 관계 관리 및 발전의 모멘텀이 형성되었음
2. 세부 논평 및 정책 제언

(1) 대만 관련

- 트럼프 2기, 미 대통령의 대대만 경제적·군사적 압박과 국방 당국의 대대만 방어 주장 간 상충되는 모습 노정
 -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유사시 군사적 개입 여부 답변을 회피하면서, 대만의 국방예산 증액 및 TSMC의 대미 투자 등 요구
 - 그러나, 미 국방 당국은 대중국 군사적 우위 및 억제를 위해 대대만 방어 필요성 주장
 - * 미 국방부의 <잠정 국방전략지침> 및 콜비 정책차관의 <거부전략> 등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의사결정상의 특징을 고려할 필요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대중국 강경론자인 우선주의자들(Prioritizers)이 중심이 되어 수립하되, 개입 자제론자들(Restrainers)의 이슈별 개입에 따른 조정, 그리고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어젠다(대중 무역 불균형 축소, 중국의 대두 수입 확대를 통한 국내 지지층 확보, 중국 희토류의 수출 통제 해제 등) 연계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
- 미중 전략 경쟁, 특히 외교안보 영역에서의 핵심이슈인 대만 문제에 대한 미측의 입장과 정책을 면밀히 검토/분석하면서, 한국의 입장과 정책을 신중하게 수립/조정해 나갈 필요
 - 대만해협 분쟁이 미중 간 군사적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위기 및 우발적 충돌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대비
 - 대만해협 위기 및 실제 무력 충돌 시,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억제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시행, 한미동맹의 미중 충돌에의 연루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대응
 - 평시에도 대만 문제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는 바, 기존 한국이 취했던 입장 중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과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 견지”를 표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반대” 등의 표현은 신중할 필요

(2) 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

-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되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승인받은 한국의 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 이슈가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짐
 -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과 관련한 문제이고, 특정 국가를 의식한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고, 중측은 지난 29일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언급한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를 바란다”라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이 군사안보와 관련된 비교적 민감한 이슈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유지한 것을 볼 때, 기본적으로 한국 신정부의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관계 발전을 추진한다”라는 전략적 방향성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향후 한중 간 전략적 신뢰를 구축하고 일관된 논리의 설명과 설득을 병행한다면, 중국의 명시적 반대로 인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은 겪지 않을 것으로 기대
 - 기본적으로 전력 도입은 주권적 사안임.
 - 한국의 원자력추진 잠수함(SSN)은 북한의 핵미사일 탑재 원자력추진 잠수함(SSBN) 개발/추진에 대한 대응을 위한 것으로, 미국의 운용체계에 종속되지 않고 한국이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임.
 - 해양의 다양한 비전통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 필요성 등.

(3) 서해 구조물

- 중국이 한중 간 서해 EEZ가 중첩되는 잠정조치수역(PMZ)에 2018년 이후 철제 구조

물을 설치하고 양식용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한국이 점검 시도에 나서자 중국이 막아서면서 이슈화

- 한국은 철제 구조물이 군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 나아가 중국이 남중국해 등에서 영유권 확대를 위해 실행하고 있는 회색지대 전략을 서해에 적용할 가능성 우려
- 이번 정상회담에서 좋은 논의가 있었으며, 실무적으로 소통해가며 문제를 풀어가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는 바, 동시에 근원적으로는 양국 간 서해 EEZ 협상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이와 함께, 군사안보 차원에서는 중국군의 서해상 군사작전 범위의 확대 및 군사적 강압 가능성에 대해 한중 간 서해 해·공역상 이견 및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위기관리 및 신뢰구축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군 해·공군의 군사적 대응능력의 점검·확충과 함께 해경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도 필요

(4) 대통령의 美 CSIS에서의 “안미경중(安美經中)” 언급의 함의

- 지난 8월 대통령의 방미 시 CSIS에서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과거와 같은 안미경중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과는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이다” 언급
 - 이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외교 노선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 즉, 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중국과는 관계를 관리/유지하는 수준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해석되어짐
- 그러나, 대통령 발언의 함의는 위의 발언, 즉 “미중 간 경쟁과 대결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언급에서 드러난 것처럼, 한국도 중국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면서, 협력할 영역과 이슈를 찾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음. 이번 한중 정상 간 여러 인식의 공유와 도출된 합의가 이러한 해석을 방증함
- 결국 미중 간 전략 경쟁 심화라는 구조적 요인의 작용하에 미국의 동맹인 동시에 중국의 동반자인 한국으로서는 국익 중심 원칙, 그리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관계의 발전을 추진한다는 방향성 하에, “균형잡힌 외교”를 지혜롭게 수행해 나가야 함./끝/

V. 정재홍 박사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1. 총평

○ 한중 정상회담 배경과 의미

- 2025년 11월 1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이는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이루어진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의 전면 복원을 선언 하였고 약 100분 동안 외교,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논의함

- 이번 한중 정상회담 특징은 미중전략경쟁 격화로 인해 민감하고 복잡한 정치-외교 갈등보다 양국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 중심 협력에 중점을 두었으며 보이스피싱 등 초국적 범죄 대응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한 것도 주목할 내용이고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중일 정상회담에서 티벳-신강 위구르 인권 문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과 상당한 대조를 보여줌

○ 한중 정상회담 주요 성과

- 양국 정상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미-중-일-러 관계를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추진한다는 중장기 전략차원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위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함

-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한국을 이사 갈 수 없는 중요하고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로 강조하며 관계의 불가분성을 부각하였고 한국에 네 가지 협력 제안인 △ 전략적 소통 강화 및 상호존중 △ 한중 FTA 2단계 협상과 미래 산업(AI, 바이오제약, 녹색산업, 실버경제) 협력 △ 청소년-미디어-싱크탱크 인적문화 교류 확대 △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 및 다자주의 실천 등을 요청하였고 상당부분 공감대를 형성함

○ 한중관계 관리와 주요 과제

-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 철회, 서해 구조물문제, 한한령, 공급망(희토류), 핵잠수함 건조 문제 등 비교적 민감한 사안들도 일부 논의되었으나 회담 이후 대통령실은 한중간 실무 협의를 통해 각종 어려운 문제를 풀어 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간단한 입장만을 밝힘

- 한중 정상회담의 논의 결과가 실제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중 양국 간 상호 소통과 협력 지점 확대가 필수적으로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중국은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등 양국의 관심사가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한중 사이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원칙으로 관리한다는 의견 일치를 이룸

2. 세부 논평

○ 정상회담 합의사항과 의미

- 한중 정상은 양국관계 개선과 복원을 위해 상호 정치적 신뢰 확보와 민간 차원의 신뢰 축적을 병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한중 고위급 정례 소통 채널을 가동하고 각종 분야 교류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과거 경쟁과 갈등으로 손상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음

-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약 7건의 합의 문서 첫째, 원-위안 통화 스왑: 약 5년 만기, 70조 원 규모 (양국 금융-외환시장 안정 기여), 둘째, 한중간 경제협력 공동계획(2026~30)을 통해 장기적 경제협력 방향 설정, 셋째, 한중 서비스 무역 협력 강화 차원에서 FTA 서비스-투자 협상 체결 추진, 넷째, 노인실버산업과 혁신 창업 협력을 위한 미래지향적 산업 협력 강화, 다섯째, 주요 농산물 중국 수출 지원 및 식물 검역 요건 협력, 여섯째, 보이스 피싱과 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와 초 국가범죄 공동대응, 일곱째, 한중 언론사 교류 확대를 통한 양국 국민 감정적 거리 해소 등에 합의를 이루었으나 상기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과거와 달리 보다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중요함

○ 한중 민생 외교 실질적 의미

- 한중 정상회담에서 강조된 민생 중심 협력은 한중 고위층 외교의 한계를 인식하고 국민 생활 개선과 민생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며 보이스 피싱 대응과 통화스왑 연장 등은 직접적으로 한중 양국에게 실질적 금융 안정과 생명-재산 보호에 기여하는 현실적 성과로 볼 수 있음

- 물론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 철회, 한한령 해제 등 한국 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은 긍정적 논의라는 매우 모호한 표현만을 남겨 향후 한중 사이 실무 협의 단계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숙제로 남음

○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재확인

-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이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을

강조한 것은 지난 윤석열 정부와 달라진 입장으로 2022년 이후 공식 발표에서 상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이재명 정부는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며 전략적 동반자관계 중요성을 강조함

-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간 수평적 협력과 실질적 성과를 강조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보여주었다면 시진핑 주석은 한중 관계 불가분성과 장기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원론적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어 한중 모두 다른 전략적 인식과 기대를 갖고 있음

○ 한반도 비핵화 입장 차이

-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였으나 시진핑 주석의 공개 발언에서는 과거와 달리 한반도 혹은 비핵화 같은 직접적인 표현이 사라짐

-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겠다고 에둘러 표현하였으며 비공식 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형식적인 수준에서 답변하고 있어 중국이 북한을 고려하여 매우 신중한 외교 표현을 사용함

○ 한중 정상회담에서 다자주의 강조

- 한중간 정상회담과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강조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는 미국 보호주의 기조와 대비되는 입장으로 APEC 21개 회원국들이 채택한 경주선언에는 자유무역 관련 문구가 없었으나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내용이 포함됨

- 중국은 트럼프 미중 무역-관세 압박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회토류 수출통제 등과같은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AMM) 공동선언에 WTO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글로벌 무역 촉진의 핵심 내용을 포함시켰으며 이는 중국이 자유무역 수호자로서 위상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반영됨

○ 중국 주도 글로벌 거버넌스 전략 제시

- 최근 시진핑 지도부는 미중전략경쟁이 격화되는 구도 속에 2021~2025년에 걸쳐 중국의 4대 글로벌 구상을 단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발전(GDI, 2021), 안보(GSI, 2022), 문명(GCI, 2023), 거버넌스(GGI, 2025) 순서로 제시하여 기존 미국 주도 국제질서에 대응하는 중국식 방안(中国方案)으로 새로운 다극화 국제질서 구축과 불공정거버넌스 개혁을 강조함

- 중국의 주변국 외교 강화와 역내 지역 전략의 체계화는 아시아 중심 지역 전략으로 더욱 구체화되고 있으며 2026년 제33차 APEC 정상회의가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는 이유도 중국 주도의 자유무역과 개혁개방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나가겠다는 대외 전략 변화가 설명이 가능함

○ 대만 문제와 핵심 이익, 핵심수합 건조 등

- 한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및 서해 구조물 등에 직접적 언급은 없었으나 중국이 강조하는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강조하며 한중간 지속적 소통 필요성을 보여줌

- 현재 중국은 핵심 이익을 △ 국가주권 △ 국가안보 △ 영토수호 △ 대만과 통일 △ 국가정치체제와 사회안정 △ 경제사회의 지속발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만문제는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익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미국은 대만 위기 대응에 군사력 초점을 맞추는 상황에서 한국은 한중 수교 당시 합의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신중하게 대응을 요구함

- 2025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해양 협력 고위급 회의에서는 △ 해양 안전 협력 강화 △ 해

양 환경 보호 조치 △ 실시간 정보 공유 및 대응 체계 구축 △ 해양 군사 긴장 완화 등을 논의하였으며 이번 한중 정상회담 이후 실무 협의는 이러한 소통채널을 통해 구체적 논의가 필요함

- 한중 정상회담에 맞춰 발표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는 기존 AUKUS 모델과 다소 차별성을 보유 하고 있으며 호주가 무기급 우라늄(교체주기 30~40년) 사용하는 반면 한국은 20% 저농축우라늄(교체주기 8~10년)을 원료로 하고 있으며 한국 자체 건조를 목표로 추진하는 등 핵확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중국측에 설명함

- 한국은 핵 잠수함 건조가 자주 국방력 강화이자 국내 조선-방산-원자력 산업생태계 활성화로 설명하고 있으나 한국의 핵잠수함 발표 이후 일본 역시 핵잠수함 건조 발표를 하여 중국을 자극하는 등 역내 군비 경쟁 발발 가능성이 크게 높아짐

○ 한국의 반중 정서 고조 현상

- 최근 한국의 대중 인식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2024년 25%에서 2025년 19%으로 감소되고 있어 조사 대상 25개국 중 유일하게 악화된 국가로 한중관계 갈등과 경쟁 원인이 지목되는 등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사회의 중국인에 대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이 심각하다고 지적함

- 현재 18-29세 한국 젊은 세대의 43%가 중국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친구 보는 비율은 2%에 불과하며 한국 리서치에 따르면 권위주의 통치방식, 동북공정, 코로나19와 황사-미세먼지 환경 문제 등에서 중국의 책임성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3. 정책 제언

○ 실용주의 대중 외교 기조 강화와 민생 중심 협력 실질화

- 현재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기조로 삼아 미중 간 균형 잡힌 외교(균형외교 아님)를 추진한다는 구상으로 미국과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을 설정하고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 트랙(Two Track) 접근을 하고 있음

-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통화 스왑 연장, FTA 협상 진전, 보이스포징 대응 공조 등을 신속히 이행해 나가고 신흥미래산업(AI, 바이오제약, 녹색산업, 실버경제) 협력을 통해 한중간 수평적 협력 관계와 상호 win-win 관계 구축이 필요함

○ 한중 민감 현안-문제 체계적 관리와 한반도 비핵화 중국 역할 강조

-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한화오션 제재 철회, 한한령, 공급망, 핵 잠수함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지속적이고 정기적 한중 고위급 정례 소통 채널을 통해 민감 현안 등을 관리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핵 잠수함은 건조까지 10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이고 저농축우라늄 사용으로 핵확산 우려를 다소 완화할 수 있도록 자주국방력 강화 차원 설명이 요구됨

- 한반도 비핵화 차원에서 한국은 중국이 △ 한반도 비핵화 △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등 3대 원칙을 견지하도록 소통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북미정상회담, 남북관계 개선 등을 위한 한중간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한중 고위급 소통 채널 활성화-제도화 및 상호간 인식 개선 전략 추진

- 약 11년만에 한국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고위급 소통채널 활성화-제도화를 조속히 가동시키고 한중 중앙-지방정부-의회-민간단체 차원의 각종 교류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한중 정치인들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중의원연맹과 의회 교류체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정부 사이 다양한 문제 등으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회와 정당 등을 통한 물밑 소통 채널 구축이 중요함
- 사드 배치 이후 급격히 악화된 한중관계 인식 대전환을 위해 청소년-언론 미디어-싱크탱크 교류 등을 확대하고 2030 청년 세대의 대중 인식 전환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교류 활성화가 필요함
- 한중 모두 무비자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 관광객 유치(2026년 6월까지 15일 무비자)를 대거 받아들이고 한국 2030 청년 세대 중국 주요 도시 방문과 다양한 관광 상품 모색이 요구됨
- 한중 청년-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상호간 적대적 인식, 역사와 문화, 이데올로기 문제 등을 최소화시키고 우호적 이웃국가로서 긍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공공외교 활동 확대가 필요함
- 최근 중국의 급격한 경제-기술 발전 등을 위협과 도전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플랫폼 등을 구축하고 중국의 딥시크, 인공지능(AI), 전기차, 휴먼로이드 로봇 등과 같은 첨단산업 방문, 소개 등이 중요함

○ 글로벌 거버넌스 전략경쟁 대응과 구동존이(求同存異)원칙 적용

-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는 구도 속에 중국이 제시한 4대 글로벌 구상(GDI, GSI, GCI, GGI)의 철저한 전략적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며 2026년 APEC 정상회의가 중국 선전개최가 결정되어 내년 APEC 한중 정상회담 협력 의제 등에 있어 실질적 소통이 매우 필요한 상황임
- 중국이 주장하는 새로운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논의에 적극 참여하되 한국의 국익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세계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진정한 이념과 가치를 견인하는 중견국 리더십을 발휘가 요구됨
- 한중 양국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국익 중심의 실질적 협력 공간을 확대하는 구동존이 미덕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며 한반도 평화 및 다자주의 강조 협력을 바탕으로 비교적 민감도가 낮은 협력 영역부터 성과를 점진적으로 구축하여 정치-안보 영역까지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는 새로운 단계적 접근 전략이 요망됨

○ 한반도 문제 협력과 정경 분리 원칙

- 현재 한반도 주도권과 북한의 영향력 확대를 놓고 미중간 본격적인 경쟁을 하고 있어 한반도 문제가 미중 전략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중 사이 보다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요함
- 우호적-안정적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경분리 원칙에 의거 이슈별 차별화(경제/문화 협력과 정치/안보 분리), 다자주의 활용(양자에서 다자관계로 확대), 전략 채널구축(한중 경제/안보 전략대화 정례화) 등과 같은 새로운 창의적 접근이 요구됨

○ 한중 실질적 협력 기반 구축과 국익 중심 실용외교 본격화

- 2025년 11월 1일 경주 APEC 한중 정상회담은 11년 만의 중국 국가주석 국빈 방한이자 한중관계 전면 복원에 이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성숙을 공식화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민생 중심 실질적 협력, 한중 고위급 소통 채널 구축, 신흥미래 산업 협력 등은 실질적 성과 가능성 토대를 마련함

- 물론 한화 오션 제재, 한한령 해제, 핵 잠수함 건조 등 복잡하고 어려운 민감 사안, 한국의 급속한 대중 인식 악화 등은 극복해야 되는 주요 과제이며 18-29세 젊은 세대에서 중국을 적으로 보는 비율이 49% 이상에 달하는 것은 장기적 한중 관계 발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실질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반중 정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한중 우호 분위기 조성이 중요함

-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기조로 민생 협력을 강화하고 복잡하고 민감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상호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될 것이며 구동존이(求同存異) 원칙으로 양국의 차이를 관리하고 상호간 협력의 여지를 확대하는 지혜가 요구됨

- 미중 전략경쟁 격화와 러우전쟁 장기화, 적대적 남북관계 등 복잡한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보다 성숙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보여 주기식 한중관계 발전이 아닌 미래 협력 지향적인 한중관계 발전 도모가 필요함

○ 한국 주도의 균형적이고 우호적 주변국 관계 구축 모색

- 경주 APEC에서 한일-중일-미중-한일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의 균형외교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한국이 미국, 일본과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도 중국과는 관계 복원에 초점을 맞춤

- 급변하는 새로운 국제질서 구도 속에서 미중, 중일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구조적 상황에서 한국이 양측과 모두 건설적이고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자산이나 미국, 중국, 일본 사이 구조적 갈등과 대립이 해결되기 어려울 경우 미중, 중일, 남북, 한러 관계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 새로운 차원 접근법을 통한 우호적 협력 구축 모색이 요구됨

- 향후 한국은 양자 관계의 발전을 통해 다자 협력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북핵 문제, 공급망 안정화, 기후변화 대응 등 공통적 관심사에서 실질적 협력을 통해 정치적 갈등을 관리하는 새로운 대중 전략이 필요함

- 2025년 경주 APEC의 미중, 한미, 한일, 한중, 중일 정상회담은 동북아 외교의 명암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어 과거 관점에서 벗어난 보다 창의적인 고민아래 새로운 주변국 대외정책 추진이 요구됨

- APEC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한일 정상회담 성공은 경제적 필요성, 정치적 의지와 상호 신뢰가 있을 때 일정 부분 갈등을 넘어 실질적 협력이 가능성을 크게 보여주었으나 미중, 한중, 중일 정상회담의 한계는 구조적 갈등과 전략적 경쟁이 심화될 때 외교적 해결의 어려움도 보여줌

- 결국 한국은 이러한 대조적 결과를 바탕으로 역내 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한 건설적 중재자 역할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국익 중심 실용주의 대외전략을 통해 정치-경제-안보적 갈등을 균형적으로 관리하는 한국형 주변국 외교모델을 구축하며 역내 위기와 갈등 완화의 균형자 외교 추진이 요망됨 /끝/

VI. 황재호 박사 (한국외국어 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1. 총평

○ 국제경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가운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는 역내 국가들의 포괄적 협력과 공동 대응 방향을 논하는 중요한 자리였을 뿐만 아니라 한중 양국 모두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음.

2. 논평

○ 중국에 APEC은 국제경제 질서 속 영향력 확대의 기회였음.

- '아태공동체'란 역내 비전도 제시하며 '책임대국'임을 표방했음. 특이점은 아태 운명공동체가 아니라 아태공동체란 명명이었음.

○ APEC은 한국에는 계엄령으로 인해 혼란했던 국가의 정상화를 넘어 다자 무대로의 복귀와 중견강국 외교 본격화를 의미함.

- '개방적 협력과 포용적 성장'의 중재자로 자리매김하고자 했음.

○ 시진핑 주석의 11년 만의 국빈 방한은 한중간 본격적인 '거리 좁히기'였음.

- 냉각된 양국 관계의 해빙 신호이자, 중국이 한국을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재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 한국은 중국과 다시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협력의 폭을 넓히고자 했음.

- 한국의 실용 외교는 중국의 아태 공동체 사이 공통점을 찾고자 했음. '경제의 안보화' 추세에도 양국 간 접점을 확대하고자 했음.

○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한 성과는

-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복원임.
- 한중 FTA 2단계 논의와 공급망 안정화 협력도 강화하기로 함.
- 양국 국민의 상호 불신 정서 개선을 위한 청년, 언론, 문화, 지방 분야의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함.
- 양국의 진전된 관계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도 공감대를 찾을 것으로 보임.

3. 제언

○ 이번 경주에 이어 내년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향후 아태 지역 경제 거버넌스의 미래에 함의를 줌.

- 경주 APEC에서 방향을 모색했다면, 선전 APEC에서는 지속적 동력 마련에 방점을 두려 할 것임.

○ 이번 정상회담으로 구축된 양국 지도자의 상호신뢰는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의 재도약을 본격적으로 견인할 것임.

○ 양국 협력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노스-사우스, 선진국-개도국, 강대국-중소국 사이의 정책적 간극을 메우는 가교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임./끝/



<제 53 회 전문가 정책포럼 참석자 프로필>

총괄기획/진행: 곽태환(郭台煥) 박사

한국 외국어대 학사 (1961), 미국 Clark University 국제 관계학 석사(1963) 및 Claremont 대학원 대학교 국제 관계학 박사학위(1969). 미국 Eastern Kentucky 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1969-1999); 경남대 교수/극동문제연구소 소장(1995-1999); 통일연구원 원장(1999-2000),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상임위원 [정책외교 분과위원회 (2001-2005)]. (전) 통일부정책자문위원, (전)전국 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협의회 회장, Global Peace Foundation(GPF)이 수여하는 글로벌 혁신적 학술 평화상 수상(2012.12.1). 경남대학교 명예 정치학 박사 수여(2019.6.4), 통일뉴스 특별 공로상 수상(2021). 한국 외국어 대학교 HUFS Award (해외 부분)수상(2025.4.18)

현재 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전문가 정책포럼 기획 주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 석좌교수, Eastern Kentucky 대 명예교수, 제 19-21 기 평통 자문회의 LA 협의회 상임고문, 제 23 기 통일교육위원 LA 협의회 상임고문, 미주민주참여 포럼(KAPAC) 상임고문, 한반도 중립화 통일 협의회 이사장(2010-2021) 현재 명예 이사장, 한국 외국어 대학교 남 가주 동문회 이사장(2022), 현 통일전략연구 협의회 (LA) 회장 등. 35 권의 저서, 공저 및 편 저자이며 500 편 이상의 칼럼, 시론, 논평 등 학술논문을 남북한관계, 한반도 통일과 4 強의 對한반도 정책에 관하여 출판하였음. 주요 저서 『한반도 평화, 비핵화 그리고 통일: 어떻게 이를 것인가?』(통일뉴스, 2019),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 구상』(1999). 공저: 『한반도 문제 해법: 새로운 모색』(한국학술정보, 2024), 『한반도 비핵 · 평화체제의 모색』(매봉, 2023), 『한반도평화체제의 모색』(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7), 『북한의 협상 전략과 남북한관계』(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7)와 번역서로는 K.J Holsti, *International Politics: A Framework for Analysis*, 4th ed. 國際政治學: 分析의 틀(博英社, 1990).

주요 영문 책 Editor & 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England,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England, 2010); *North Korea's Foreign Policy under Kim Jong Il: New Perspectives* (Ashgate, England, 2009); *North Korea's Second Nuclear Crisis and Northeast Asia Security* (Ashgate, England, 2007)등 통일뉴스, LA 중앙일보, 브레이크 뉴스(Break News) 칼럼리스트.

연락처: thkwak38@hotmail.com; 070-8864-2106; 미국 +1-310-729-8383(Kakao talk)

발제자: 김예경 박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으로 있다. 주요한 연구 분야는 중국 정치와 외교이다. 중국 북경대학 국제정치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술연구교수,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보고서는 “2025년 중국 양회 주요내용과 한·중 협력 방안”(2025), “대만문제 관련 한미일 공조 현황과 한중관계”(2025) 등이며, 논문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후 미중

전략경쟁의 쟁점과 접점”(2022), “북중수교 70년 평가와 중국의 대북정책 딜레마: 북핵문제를 중심으로”(2019), “중국의 동북아 정세 인식과 대북정책의 딜레마”(2017), “The European Union, Regional Integration, and Conflict Transformation in the South China Sea Territorial Disputes”(2017) 등이 있다.

이메일 주소 및 연락처: yeikyoung@hanmail.net / 010-8791-5218

토론자 프로필 (가나다 순)

1. 이병철 박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주요 경력】

- 前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 행정관)
- 前 국회의장 통일정책 특보, 정책기획비서관
- 前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연구위원
- 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前 서울대학교 원자력미래기술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
- 現 한국행정정책학회 이사, 편집장
- 現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
- 現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사
- 現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관심분야】

핵비확산, 핵안보, 북핵, 한미관계, 북미관계, 원자력정책

연락처: 010-8937-2720, bcleebc@kyungnam.ac.kr

2. 이상수 박사 (제주 평화연구소/한국외대 글로벌 정치연구소 초빙연구위원)

전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핵/WMD대응 연구센터 책임연구원

학력: 고려대 영어영문학 학사(1989);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석사(1994);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박사(2003)

경력: 한화경제연구원 특수연구센터 주임연구원(1994-1998); 고려대 평화연구소 연구교수(2005-2006);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핵/WMD대응연구센터 책임연구원(2006-2024);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정치학과 방문학자(2013.-2014),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GSIS)외래 교수(2014.9-12); US Naval War College 방문 교수(2018.9.1.-2019.3.1.)

주요 논문

**Sangsoo Lee. Evolution of Jangmadang and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Focus on Recalibrating South Korea's Economic Policy towards the Democratic People's*

- Republic of Korea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23(1), 2018.(KCI)*
- *Sangsoo Lee. *The ROK's Past Administration's Security View against the DPRK and Policy Direction for the Future. Social Science Review, 47(1), 2016. (KCI)*
- *Sangsoo Lee. *The DPRK's Return to Dialogue," the US Perception, and the ROK's Trustpolitik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19(2), 2014. (KCI)*
- *Sangsoo Lee. *Paradox of Neoliberalism: Arab Spring's Implications on North Korea (North Korean Review, Volume 8(1), 2012. (SCI)*
- *Sangsoo Lee. *A New Option for Development of Human Security in East Asia: Reforming the ASEAN Regional Forum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13(2), 2012. (KCI)*
- *Sangsoo Lee. *The UN's Human Rights Policy towards North Korea: The Limit of the Neoliberal Approach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13(2), 2012. (KCI)*
- *Sangsoo Lee. *Universalism VS. Relativism: US Human Rights Policies towards China and Nor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13(1), 2008. (KCI)*
- *Sangsoo Lee. *Japan's Revision of the Peace Constitu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Peace Studies 14(2) 2006. (KCI)*
- *Sangsoo Lee. *Anti-Corruption system of the Singapore: Lee Kwan Yews strategy on corruption. Southeast Asian Review, 16(2), 2006. (KCI) 등 다수.*

주요 저서

이광요의 국가경영리더십, 한국학술정보주, 2005

동아시아 공동체의 설립과 평화구축(공동저술), 동북아 역사재단, 2010. 등

연락처:010-4200-4328, e-mail: david1@daum.net

3. 이영학 박사 (한국국방연구원 인태 안보연구실장)

1. 학력:

- 중국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학원 박사(2011.1.)
- 중국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학원 석사(2003.8.)
-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 학사(1997.2.)

2. 경력:

- 한국국방연구원 인도-태평양 안보연구실장(2024.12.16~현재)
-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2021.12.~2023.10.)
- 한국국방연구원 대외협력실장(2020.1.~2021.10.)
- 미국 국방대학교(NDU) 국가전략연구소(INSS) 방문학자(2018.5.~2019.4.)
-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연구위원(2014.2.~)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연구교수(2012.11.~2014.1)
- 외교통상부 동북아국 중국정세분석팀 선임연구원(2011.1.~2012.10.)

3. 지난 3년간 주요 학술활동:

- 류동원·이영학, 『대만해협 내 중국군 특이동향 분석 및 한국에 대한 시사점 모색』,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2025년 7월.

- 이영학, “2024 년 중국의 국방,” 국립외교원 『2024 중국정세보고』, 2025 년 3 월
- 이영학, “중국 2025 년 양회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포커스, 2025 년 3 월.
- 이영학, “시진핑 3 기 중국의 외교안보정책 쟁점과 전망,” 한양대학교 ERICA 신종호 외, 『중국 시진핑 3 기 지도부의 대내외정책 쟁점과 전망』, 2023 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중 미래비전포럼 종합연구, 2023 년 12 월.
- 이영학,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해 중국군 현대화를 조속히 추진하다,” 이희옥·조영남 엮음, 『중국식 현대화와 시진핑 리더십』, 2023 년 3 월, 책과함께.

4. 연락처:

- 이메일: rongxue@hanmail.net / rongxue@kida.re.kr
- 휴대폰: 010-2325-5969

4. 정재홍 박사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중국연구센터장)

학력: 중국 북경대학교 졸업, 중국 사회과학원 정치학 박사.

경력: 現) 경기도 국제 평화교류위원회 위원, 前)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겸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베이징 Grandview Institution 및 상하이 Shanghai Institutes for International Studies (SIIS), Valdai Discussion Club(Moscow) 방문 학자 등을 역임.

주요 연구분야: 중국 안보(외교/국방), 중러-미중/북중-한중관계, 유라시아(동북아/한반도)문제 등

최근 5년간 주요 저서: 『시진핑 집권 2기 이슈와 전망:국방/안보 분야』 (2019, 공저) 『현대 중국외교의 네트워킹 전략연구』 (2020, 공저), 『국가정체성과 한중일 관계』 (2020, 공저), 『미중패권경쟁 시대 한국의 대외전략』 (2021, 공저), 『2020 동아시아 안보전략 평가』 (2021, 공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선택연구』 (2021, 공저), 『미중러 3국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2022, 공저), 『China-Russia Strategic Security-Economic Partnership and Expansion of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after the Ukraine Crisis』 (2023, 공저), 『미중러 3국 전략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2022, 공저), 『Changing Global Order: Evolution of NATO Partnerships and its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2023, 공저), 『Changing Global Order: China's Influence and Strategy』 (2024, 공저) 등.

연락처: HP(010-7577-0400) jameschung@sejong.org / james55@daum.net

5. 조성렬 박사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전 오사카 총영사)

주요 학력: 서울공대 화학공학과 졸업, 성균관대 대학원 정치외교학 석사 및 박사, 도쿄 대학 대학원 종합연구과, 게이오대학 법학부 및 중국외교학원 방문학자

주요 경력: 현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 전 주 오사카 총영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자문위원. 전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전 북한연구학회 회장

주요 저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 DIME 분석과 삼별 구상』,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 포괄적 안보-안보 교환론』, 『닉슨행정부 시기 주한미군 감축 협상』, 『전략공간의 국제정치: 핵·우주·사이버 군비경쟁과 국가안보』, 『뉴 한반도 비전: 비핵 평화와 통일의 길』,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체제의 전망』, 『주한미군: 역사·쟁점·전망』, 『정치대국 일본: 일본의 정계개편과 21세기 국가전략』 등

연락처: insscsr@naver.com, 010- 7733-3286

6. 황재호 박사 (한국외국어 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현직: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학력 런던정경대 국제관계학 박사

주요저서: 나의 중국 신 관찰 등

연락처: londonhwang@daum.net, 010-4216-0817



Special Note: 제 53 회 전문가 정책포럼에서 밝힌 견해와 내용은 포럼 참석자들의 개인 견해이며 한반도 미래 전략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찾아오는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하이투자증권빌딩 15층
5호선, 9호선 여의도역 (3번출구) 문의: 02-3448-8500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Institute for Korean Peninsula Future Strategies

연락처: 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 전문가 정책포럼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IM 증권 빌딩 15층, 5호선, 9호선, 여의도 역 (3번출구), 한국글로벌피스재단. 사무실: 전화번호: 02-3448-8500; 070-0505-3803(직통); Fax:02-325-8509.

총괄기획: 곽태환 교수 카카오 토크 +1-310-729-8383. Email: thkwak38@hotmail.com

사무국장: 김한솔 국장 (사무실) 070-5050-3838; Mobile:010-5122-2439 Email: hskim@globalpeace.org

담당자: 기성훈 팀장 Mobile:010-6554-6394. Email: sunghoon@globalpeace.org

